

한반도 동향

2023년 7월

- I. 한반도 일지
- II. 북한 매체 주요 보도
 1. 대 내
 2. 대 외

편집책임	장철운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세라 경영지원실 연구원
작성 자	권주현 북한연구실 연구원	안정은 기획조정실 연구원
	김아영 인권연구실 전문연구원	윤훈희 인권연구실 전문연구원
	용혜민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원	
	탁민지 기획조정실 연구원	

이 달의 주요 동향

한국

尹대통령 부부,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개최 ... IAEA 사무총장 방일 후 방한

북한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열병식 개최 ... 러 군사대표단 및 中 대표단 방북
김정은, 《화성포-18》형 시험발사 지도 ... 국방상, 美 SSBN 부산 기항은 핵사용 조건 해당 가능 위협

미국

존 케리 기후특사 및 재무장관 등 방중 ... 中과 고위급 협의 지속
켄터키함(SSBN) 부산 입항 ... 北 화성-18 발사 관련 UN 안보리 공개회의 개최했으나 성과 별무

중국

리훙충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 등 당 및 정부 대표단 방북 ... 김정은 접견
갈루과 게르마늄 수출 제한조치 발표(8월 1일부터 시행) ... SCO 정상회의 印서 개최(화상)

러시아

국방장관 등 군사대표단 방북 및 김정은 접견 ... 상원의장 방중 및 시진핑 접견
中과 '북부·연합-2023' 해·공군 훈련 동해에서 진행 ... 흑해곡물협정 이행 종료 발표

일본

기시다, NATO 정상회의 참석 ... 사우디아라비아·UAE·카타르 방문
한·미와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방어훈련 실시 ... IAEA 사무총장 방일

I

한반도 일지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 (토)	북한-대내	• 당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성·중앙기관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6.28.~30.) 보도 - 철도성, 육해운성, 평양건설위원회, 국가과학원, 문화성, 체육성 등에서 진행 -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상반기 사업정형 분석총화 - 당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가 명시한 투쟁과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 토의
	북한-대외	• 김성일 외무성 국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 방북 계획 관련 거부 담화(조선중앙통신)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정몽헌 회장 20주기 추모식으로 금강산에 방문하고자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평화위)와 접촉하기 위한 계획을 통일부에 신고 - 외무성은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 표명 - 또한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 정부의 입장이며, 방북 문제에서 아태평화위는 어떤 권한도 없다고 밝히고 “이러한 원칙과 방침은 불변”하다고 단언
	한국	• 윤 대통령,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 -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 안 된다” -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 통일부, 北 외무성 담화 관련, “북측이 순수 추모 행사를 위한 목적의 방북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유감” - “현대아산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은 관계부처와 협의”...“북한 발표 내용을 고려하여 처리해 나갈 것”
	한·미	• 한·미 특수전지휘관, 美 핵추진잠수함 동승(6.20.) - 미 국방부, 한국 손식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박후병 해군 특수전전단장이 지난달 20일 미국 원자력추진순항미사일잠수함(SSGN)인 ‘미시간함’에 탑승했다고 밝힘. - 미시간함은 6월 16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도착해 6월 22일까지 기항함. - 손 사령관과 박 단장은 데릭 린슨 주한 미군 특수전사령관, 미시간함 함장 제이슨 게디스 대령과 회동
7. 3. (월)	한국	• 통일부, 주요 정책 방향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강조...‘평화적’ 표현 삭제 -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는 한편 담대한 구상에 따른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공탁 실시 - 현재 생존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판결금 수령 -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은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대상자는 언제든지 판결금 수령 가능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3. (월)	한·중·일	•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 개최(중국 칭다오) - 왕이 당 중앙위 외사판공실 주임 개막식 연설, '한·중·일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이익의 관계...중국은 선린의 전통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 몇몇 주요국들이 추구한 팽창과 약탈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며, 오늘날의 한 국가에 의한 일방적 괴롭힘을 반대' - 박진 외교장관, 하야시 외무상은 화상으로 인사
	미국	• 하원 군사위, 국방부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 요구 - 군사위,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 현황 및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 - NDAA 보고서는 국방부 정책 차관 및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 일본과 관련한 최근 방위 협력 노력, △한국 및 일본과 미국 간 양자 및 한·미·일 3국 간 방위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한국, 일본의 신규 또는 추가 협력 조치 등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
	중국	• 상무부, 갈루과 게르마늄 수출 제한조치 발표...8월 1일부터 시행 -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수출통제는 국제관례이며, EU회원국도 관련 제품 및 자원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님'
	일본	• 마츠노 관방장관, 정례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위해 북한과 사전 물밑접촉을 하였 다는 한국 보도에 대해 부정
	기타	• NATO 군사위원장,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ATO 정상회의(7.11.~12.)에서 논의될 새 방위계획인 '지역계획(regional plans)'은 유사 시 NATO 병력 30만 명을 유럽 동부전선에 30일 이내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 - 동 계획은 냉전 종식 약 반세기 만에 수립된 것이며, 최우선 과제는 전쟁 억지라고 강조
7. 4. (화)	북한-대내	•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관련 주요 부문에서 상반기 계획 초과완수 발표(7.3.) 보도 - 각종 생산계획을 초과 완수(압연강재(112%), 질소비료(102%), 전력(101%), 석탄(104%), 유색금속(146%), 화물수송(105%), 천(102%), 수산물(102%) 등)하고, 여러 부문의 생산 성과가 기한 전에 완수되며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선전
	한국	• 통일부, 남북 협력사업 산하 조직 예산 감축 지시 - 통일부 관계자, "지난달 산하 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예산안 감축을 지시"
	한·중	•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 中 외교부 쑹웨이둥 부부장 등 면담(베이징) - 최영삼 차관보, 쑹웨이둥 부부장 양측은 교역 증진 및 안정적 공급망 관리 필요성 등에 공감 하였으며, △양국 관계의 장기적·미래지향적 증진을 위한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 △1992년 수교 당시 공동성명을 통해 한·중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한·중 간 북핵 문제 관련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미국	• 뉴저지주 하원,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발생한 전쟁에서 3만 3천 명의 미군이 사망했고, 전쟁의 경험을 공유한 한·미 양국은 동맹 관계를 발전 시켰다는 점을 강조
	중국	•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IAEA 보고서는 리뷰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의 시각을 담지 못했다' - IAEA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의 방패막이 혹은 청신호가 되어서는 안돼...일본은 IAEA와 함께 주변국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장기적인 국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할 것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4. (화)	일본	〈 IAEA 사무국장 일본 방문 〉 • ‘후쿠시마 제1원전의 ALPS처리수 안전성 리뷰에 대한 IAEA 포괄 보고서’ 발표 - IAEA는 ALPS처리수 방출은 방사선과 관계하여 사회적·정치적·환경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포괄적 평가에 따르면 사람 및 환경에 대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방사선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 그러나 처리수 방출 작업 중에도 적합성 평가를 위해 이미 평가된 기술적 사항들도 여러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음. - IAEA는 리뷰기간 동안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동행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할 것임. • IAEA 사무국장, 기시다 총리 면담 - IAEA 사무국장, IAEA 포괄보고서는 과학적·중립적 내용으로 일본 정부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포함 - 기시다 총리, 우크라이나 원자력 및 핵 안전 확보를 위한 IAEA의 노력을 높게 평가 - 양측은 이란, 북한 핵문제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계할 것임. • IAEA 사무국장, 日 외무상 회담 - 국제안전보장환경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핵비확산 시각에서 북한 및 이란의 핵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비확산과제 및 IAEA 보장조치 강화 등에 대해 연계를 지속할 것을 확인 - IAEA의 중립적·전문적이며, 투명성 있는 활동에 사의 표명
	기타	• 엔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임기 1년 연장 - 사무총장은 트위터로 유럽과 북미간 대서양 연대와 동맹이 중요함을 강조…바이든 대통령, 환영 성명을 통해 NATO와의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단합되어 있다며 앞으로의 협력 기대감 표명 •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한 종합 보고서(comprehensive report) 발표 - 보고서는 안정성 검토 요청 후 2년 3개월여 만에 발표되었으며, 방류 계획이 구체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 가능한지 등의 안정성 검토가 골자 - IAEA는 종합보고서를 통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냈으며, 향후 오염수 방류 과정은 물론 이후 상황까지 점검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
7. 5. (수)	한국	• 합참, 북한 위성 잔해물 인양·탐색…“군사적 효용성 없다” - “지난 5월 31일부터 시작한 북한 우주발사체 등 잔해물 탐색 및 인양작전을 7월 5일부로 종료” -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하여 한·미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 - 정찰 위성인 경우 해상도가 최소 1m여야 하지만, 북한 위성체는 해상도 10~20m 수준으로 파악
	미국	• 美, ‘중과 패권 경쟁’ 태평양서 역대 최대 규모 다국적 훈련(7.5~21.) - 항공기동사령부(AMC), ‘모빌리티 가디언 2023(MG23)’으로 불리는 다국적 수송 훈련을 7월 5일부터 21일까지 진행 - 이번 훈련에는 주로 하와이, 괌, 호주, 일본 등 기지에서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소속 병력 3천여 명이 참여
	중·러	• 중·러 해군연합훈련 진행(7.5~11.) - 러시아 해군 태평양함대의 그롬키호와 소베르센니호 호위함이 이끄는 함정편대가 상하이 방문, 양쯔강 하구 동쪽 해역에서 중국 해군 타이위안함과 편대 기동, 통신, 해상 수색 등 합동훈련 진행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6. (목)	북한-대내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7.5.) 보도 - 김덕훈(내각 총리), 박정근·양승호(내각 부총리) 등 참석 -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회의 결정 집행을 위한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정책 분석총화 - 당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 토의 - 하반기에 당의 결정을 철저히 담보할 것과 농업 부문 지도, 국토관리 및 생태환경 보호사업 추진, 당의 육아정책 관철, 품질감독 사업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관련 결정을 전원일치로 채택 • 농군맹 중앙위 제9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7.5.) 보도 - 당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문제와 2023년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농군맹 조직의 과업을 논의 - 선진 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관개체계를 완비하는 등 과학농사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지적
	중국	•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미국 전략해점수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우려 표명...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옳은 길을 포기하고, 군사적 억제와 압박을 택한다면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적대라는 안보의 멍을 풀기 어려울 것'
	일본	• 일본-튀르키예 전화 정상회담 - 지난 2월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에 대해 현재까지 850만 달러의 긴급무상자금협력을 지원, 향후 이에 더하여 무상자금협력 3천 4백만 달러, 5.5억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것
	UN	• 세계식량계획(WFP), 올 하반기 77만 명 대상 북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 3천800달러(약 497억 원)로 추산...작년의 지원금 목표 3배 넘는 수준, 모금액이 목표보다 1천 200만 달러(156억 원) 부족
	기타	•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인도 뉴델리에서 화상으로 개최 -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집단화와 이념, 대립적 사고를 통한 국제 및 지역 문제 해결에 반대하며, 특정 국가나 국가 그룹의 일방적이고 무제한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 확장은 국제 안보와 안정에 부정적이며, 핵 비확산에 대한 엄격 준수 요구에 대한 의견 수렴 - 시진핑 주석 연설, '△SCO 회원국들은 단결과 상호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중국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적용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회원국들은 지역 평화와 공동의 안보를 수호해야 함, △중국은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회원국들은 경제 회복과 실질적 협력에 집중해야 함, △SCO 회원국들 간의 인적 교류를 강화해야 함, △다자주의의 실천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7. 7. (금)	북한-대내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6.6.) 보도 -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 관련 전쟁노병과 전시 공로자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한 기념메달 제정 • 청년동맹 중앙위 제10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7.6.) 보도 - 당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일군과 청년들을 동원하기 위한 선전선동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 것에 대해 강조하고 관련 결정서 채택
	한국	•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 -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주한 국제기구, NGO, 국내외 인권단체 및 인권, 안보 연구소 및 외교부·민주평통 해외 지역협의회 등 정부기관에 배포 계획 - 지난 4월 사전 공개한 영문판에서 논란이 일었던 '통일부는 보고서에 담긴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은 삭제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7. (금)	한국	〈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한(7.7~9.) 〉 •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장 면담(7.8.) - 그로시 사무총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해 최근 IAEA가 발표한 종합보고서의 과학 기술적 검토에 대해 설명 - 유 위원장, IAEA의 지속적 검증과 함께 한국 전문가와 전문가기관의 참여를 요청, 그로시 사무총장은 “가능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 • 박진 외교부장관 접견(7.8.) - 그로시 사무총장,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의 안전성을 평가한 IAEA의 종합보고서 내용을 박 장관에게 설명 - 박 장관,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하에 오염수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음을 설명하고, 안전성 검증과 국민적 안심을 위한 IAEA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박 장관, IAEA가 그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평가하였고, 양측은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 향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국회 방문 및 민주당 의원들 면담(7.9.) -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인 위성곤, 우원식, 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석 - 우원식 의원, 모두발언에서 “IAEA 입장은 일관되게 ‘오염수 해양방류 지지’였다”...“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미리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그로시 사무총장,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완전히 검토하기 위해 수십년간 일본에 상주할 것”
	한·일	• 6월 말 개최한 우리 군의 동해영토수호훈련에 대해 日 외무성 항의 - 日, 한국군의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인 것을 강하게 항의함. - 韓,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
	미·중	• 재닛 옐런 美 재무부 장관 중국 방문, 리창 총리 면담 - 美, 미국은 탈동조화(decoupling) 혹은 단절(disconnection)을 희망하지 않으며, 중국의 현대화를 방해할 의도가 없음...이견으로 인한 오해를 피하고, 거시경제 안정과 글로벌 도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 - 中, 중국의 발전은 미국에 있어 위협이 아닌 기회, 경제협력을 정치화하거나 안보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양국과 전 세계의 경제발전에 악영향...양국의 경제관계에 안정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 - 中, △관세 추가 부과 취소, △중국 기업 탄압 중지, △양국 상호 투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 △대중국 수출 통제 완화, △신장위구르자치구 생산물 금수조치 취소 등에 대한 문제 제기
7. 8. (토)	북한-대내	• 김정은, 김일성 사망 29주기 관련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꽃바구니 진정 - 김덕훈·조용원·최룡해(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등 동행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7.1.) 보도 - 김일성·김정일에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 기념메달 수여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9. (일)	북한-대외	•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 담화(조선중앙통신) -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평가보고서를 명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려는 것을 거냥하여, “악성종양 등 인류의 생명안전과 생태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고 주장 - IAEA는 환경평가기구가 아니며, 인류의 생명 안전과 건강 보장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있고 수많은 환경보호단체들이 반대와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열성을 보이는 것에 대한 의혹이 짙어진다고 주장 - 주권국가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도 문제삼던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극구 비호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중 기준을 보여주며, 한국과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정학적 목적 추구만을 원하는 불순세력에 의해 지구의 생태환경이 엄청히 위협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난
7. 10. (월)	북한-대내	• 김덕훈(내각 총리), 평안남도·황해남도·황해도 농업 부문 사업 현지요해 - 가을의 밀·보리 농사 준비, 재해성 이상기후 및 병충해 피해 방지, 과학농사의 중요성 등에 대해 지도
	북한-대외	• 국방성 대변인, 최근 미국의 한반도 지역 군사활동 관련 담화(조선중앙통신) - 미국 국방부가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변국가들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핵공갈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이라고 비난 - 한반도 지역에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극단의 상황”이 조성되는 여부는 미국의 향후 행동에 달려 있으며, 돌발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또한 미국이 최근 공중정찰 수단을 동원하여 적대적인 정탐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7월 2일부터 9일까지 전략정찰기 RC-135, U-2S, RQ-4B가 동해와 서해 상공을 비행하고 특히 동해에서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수십 킬로미터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 - 1969년 미군 정찰기 EC-121과 1994년 주한미군 OH-58이 격추당한 사건과 2003년 3월 정찰기 RC-135에 대한 북한 지역 유인 시도 사건을 거론하며, “미국의 도발적인 공중정찰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위협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미국 공군의 대북 정탐활동 관련 담화(조선중앙통신) - 10일 오전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미국의 대북 공중정찰 활동을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함참이 북한의 영공 침범 주장은 허위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와 미 국방성이나 미 인디애나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 자처해 나서고 있다”고 비난 - 당일 오전 새벽 5시경부터도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울진과 통천 동쪽 해상 상공에서 북측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며 공중정찰을 감행했고, 북한 공군의 대응 출격에 한차례 퇴각한 후에도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해상 상공에서 다시 해상군사분계선 상공을 침범하는 군사적 도발을 했다고 주장 - “미국 간첩비행기들이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곤 하는 우리 경제수역 상공 그 문제의 20~40km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북측 경제수역 바깥에서의 정탐 행위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겠지만 또다시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경제수역을 침범할 경우 분명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위임에 따라 반복 경고한다고 발언
	한국	• 尹 대통령,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AP 통신 서면 인터뷰) -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0. (월)	한국	것”...“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 - “나토 회원국·파트너국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 - “유럽의 사건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듯, 인태지역의 사건도 유럽 국가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나토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 -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계속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 • 합참, “美 정찰기 ‘영공 무단 침범’ 北 주장은 허위” - 합동참모본부, 북한이 미군 정찰기가 영공을 무단 침범하여 공중 정탐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 - “미국 공중 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 활동”...“허위사실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힘.
	미국	• 美, 北의 美정찰기 격추 위협에 “긴장조성 행동 자제해야” -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 북한이 미군 전략정찰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하면서 미군기 격추를 위협한 것과 관련 “우리는 북한에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면서 “북한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 - 이어 중국의 대북 역할과 관련,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베이징에 방문했을 때 나왔던 이슈”라면서 “우리는 중국이 선택한다면 역할을 할 수 있고,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 -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 “북한 발언을 봤다”며 “미국은 언제나처럼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 - 이어 북한 영공 등에서 비행한 사실이 없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며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국제법에 따라 항상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작전한다. 따라서 그러한 비난은 비난일 뿐”이라고 지적
	중국	• 왕이 당 중앙위 외사판공실 주임,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중국 베이징) - 공동의 미래를 위한 라오스-중국 커뮤니티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중·러	• 러시아 상원의장 중국 방문, 시진핑 주석 접견 - 양국 정상의 공동이해에 대해 법적 차원에서의 보장이 필요한 것에 대해 의견 일치
7. 11. (화)	북한-대내	• 양강도 농촌건설 지원을 위한 중앙 및 지방의 당원대대 결의모임 진행(7.6.~10.) 보도 - 김정은이 전당의 당원들에게 양강도 농촌 살림집 건설 지원을 지시하였으며, 양강도에 대한 지원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과 부흥을 이룩하고 집단주의 정신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선전 • 여맹 중앙위 제7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의 진행(7.11., 화상회의) 보도 -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여맹의 상반기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제8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법을 논의 - 여맹원을 당중앙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시키며 조직 사상생활을 정규화·규범화할 것, 나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사회주의 애국운동·대중운동을 힘있게 전개할 것,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쓸어버리고 ‘우리 식,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한 교양과 투쟁에 보다 노력하며 자녀교양에서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 등을 독려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1. (화)	북한-대외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미국의 대북정찰 관련 추가 비난 담화(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비난한 미군의 대북 정찰활동 관련하여 합참이 10일 “한미동맹의 공해 상공에서의 정상적인 비행활동”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을 지적하며, “해당 공역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군과 미군 사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군부강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비난 - 10일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5시 15분부터 13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km~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km 해상 상공에서 조선동해 우리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례 걸쳐 무단 침범하면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전날 담화에서 세부내용을 보강 -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행동을 이미 예고”했으며, 무단 침범이 반복되면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최섉희 외무상, 미국의 우크라이나 침묵 지원 관련 규탄 담화(조선중앙통신) - 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침묵탄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여 국제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까지 위태하게 만드는 반인륜적 만행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 - 침묵탄 지원 계획은 “침략과 살육을 국책으로, 생존방식으로 삼고 있는 평화도살자로서의 정체를 다시 한번 스스로 드러내보인 것”이며,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의도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원흉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인류의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실증하여 준다”고 주장 - “위임에 따라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량살륙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세계를 새로운 참파 속에 몰아넣으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로 준렬히 규탄하며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북한 정부와 인민은 러시아가 반드시 중국적 승리를 이룩할 것을 확신하고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발언
	한국	〈尹 대통령, NATO 정상회의(리투아니아) 참석 및 폴란드 순방(7.11.~14.)〉 • 尹 대통령, NATO 정상회의 계기 美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7.11.) - 美 상원 NATO 옵서버 그룹 활동 차원에서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美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우크라이나 문제, 한국과 NATO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 •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7.11.) - △대화: 정무·군사 분야 정례회의 개최, △대테러 협력: 나토 대테러 훈련 참여, △군축·비확산: 관련 협의 개최 및 분석 공유, △신기술: AI·우주·미사일·양자 기술 협력, △사이버방위: 양측 사이버훈련 참여, △역량 개발: 국방 역량 강화 협력 모색, △군사: 한국군의 나토 주도 훈련 참여, △과학기술: 나토 프로젝트 참여, △기후 변화: 나토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성-평화안보: 나토 관련 활동에 참여, △공공외교: 나토 전략소통센터와 협력, 총 11개 분야 -尹 대통령,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인·태 지역 국가들과 나토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 스톡홀름 나토 사무총장, “안보는 더이상 지역적이지 않고 글로벌하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 -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은 2012년 9월 한·나토 간 체결한 ‘개별 파트너십(IPCP)’을 격상한 것임. • 한·노르웨이 정상회담(7.11.) -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 동향, 국제무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尹 대통령,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와 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1. (화)	한국	- 스토틀레 총리, 양국이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탄소포집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방산분야에서도 협력 증진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희망 및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1-22년) 및 북한제재위 의장국을 수임한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극 지역 연구,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한·네덜란드 정상 오찬회담(7.11.) -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방안,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 - 양 정상은 지난 11월 루터 총리의 방한 이후 국방안보, 인공지능, 반도체, 원전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데에 만족을 표하였으며, 지난 2월 두 나라가 제1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성공적으로 공동 주최한 것을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내년 중 개최 예정인 제2차 REAIM 회의가 구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또한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평가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이러한 협력이 더욱 심화·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정부 차원의 소통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한·포르투갈 약식회담(7.11.) - 코스타 총리, 포르투갈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의 가치사슬 연대에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尹 대통령은 양국 기업 간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하고, 향후 디지털, 개발협력, 인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 尹 대통령,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코스타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였음. -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합치하였고 尹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을 설명하며 포르투갈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였음. • 한·뉴질랜드 정상회담(7.11.) - 양 정상은 △경제통상, 국방, 인적교류 등 양자 실질 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역내 공급망 안정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 △워킹홀리데이, 유학, 관광을 통한 양국 국민 간 인적 교류가 확대되도록 지원, △NATO 파트너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尹 대통령, 2030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 • 한·헝가리 정상회담(7.11.) - 尹 대통령, 헝가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인력 확보와 원활한 활동을 위한 헝가리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요청 및 바이오와 같은 유망분야 R&D 협력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 협력까지 양국 협력의 외연을 계속 확대해 나가길 희망 - 오르반 총리, 한국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한국과 연구개발(R&D) 협력과 방위 산업 협력 등을 통해 헝가리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한-헝 양국 간 학생 교류도 활성화하여 국민 간 유대가 더욱 돈독해지길 희망 - 尹 대통령, 헝가리가 지난해 초기에 부산 엑스포 지지를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1. (화)	한국	• 한·루마니아 정상회담(7.11.) - 尹 대통령, 양국이 그간 협력해온 자동차, 철강 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원전, 인프라 개발, 방산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기대, 요하니스 대통령, 루마니아 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정세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尹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루마니아 정부의 지지를 요청 • 한·스웨덴 정상회담(7.11.) -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 동향, 국제무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 크리스터손 총리, 양국이 그간 바이오,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했으며 향후 협력의 범위를 지속 확장해 나가기 기대 - 尹 대통령,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해지는 양국 협력이 고무적이라 밝혔으며, 공급망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음. - 양 정상은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협력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尹 대통령,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을 설명하며 스웨덴 정부의 지지를 요청 •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회담(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7.12.) - 尹 대통령, “북한의 도발은 아태지역과 세계 평화 그리고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 “우리는 이러한 도발을 묵과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결속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각국 정상,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역내 평화와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에 엄정히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 발표 • 나토 정상회의(7.12.) [尹 대통령 연설] - “1년 5개월째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세계 경제는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북한 정권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을 뒤로 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디지털 매체와 사이버 공간은 가짜뉴스 유포와 대중 선동의 도구로 전락” - “이러한 위협들을 만들어 내고 조장하는 것은 바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세력”...“이럴 때일수록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들이 더욱 굳게 연대하고 협력” -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지뢰 제거 장비, 긴급 의료 후송 차량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우크라이나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NATO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도 참여할 예정” - “오늘 북한은 또다시 ICBM을 발사”...“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 - “우리는 더욱 강력히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대응해야 할 것”...“NATO 동맹국들이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것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 -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대한민국의 인태 전략 역시 NATO를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 -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NATO와 ITTP를 체결하고 상호 군사 정보공유도 확대”...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1. (화)	한국	“한국은 작년에 아시아 최초로 NATO의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가입하였고, 대규모 사이버 훈련 ‘락드실즈’에 참가”...“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할 예정” • 한·에스토니아 약식회담(7.12.) - 양 정상은 △한국과 에스토니아가 IT 강국으로 디지털 네이션스, NATO 사이버방위센터에 함께 참여하는 등 디지털, 사이버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뜻깊게 생각, △최근 양국 방산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향후 양국 간 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 -尹 대통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에스토니아 정부의 지지를 요청 • 한·슬로바키아 약식회담(7.12.) -尹 대통령, △우리 진출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에 대한 차푸토바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향후 양국이 국방, 방산, 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하였으며, 차푸토바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투자할 수 있기를 희망,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 기업 활동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 △한국과 방산협력을 신속히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尹 대통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슬로바키아 정부의 지지를 요청 • 한·일 정상회담(7.12.) - 양 정상은 △한·일 고위경제협력회의 연내 재개 합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尹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 및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줄 것을 요청,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줄 것을 요청 -기시다 총리,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여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을 것,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 (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 △동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 • 한·핀란드 정상회담(7.12.) - 양 정상, △그간 협력이 지속되어 온 과학기술, 방산 분야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지원,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 △6G 공동 연구와 국제표준 제정에 긴밀하게 협력, △최근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정세를 포함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尹 대통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지지를 요청 • 한·리투아니아 정상회담(7.12.) -尹 대통령, △바이올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당부, △한-리투아니아 관계 발전을 위해 주리투아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개설을 결정하였음을 공식 통보 -나우세다 대통령, △한국의 세계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 하였고, 특히 유럽 내 다른 나라들이 호평하고 있는 한국산 자주포 등 무기체계에 큰 관심, △박람회 지지 요청 검토, △주리투아니아 대사관 개설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양국 상주공관을 통해 호혜적인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하였음.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1. (화)	한국	• 尹 대통령, 폴란드 동포 초청 간담회 참석(7.12.) -尹 대통령, 격려사를 통해 한국과 폴란드는 34년 전인 1989년 수교한 이래 모범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왔다고 하고, 이제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자리 잡았다고 평가, △지난해 90억 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교역 규모를 기록하고, 폴란드 현지에서 300개가 넘는 우리 기업이 활동 중이라며, 방위산업, 원자력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이 한층 심화하기를 기대 -수교 직후부터 주재원, 학계 인사, 문화 예술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폴란드 동포사회가 상부 상조하는 문화를 정착, △폴란드 동포사회가 코로나 유행 당시 술선수범하여 긴급 귀국과 백신접종에 나서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 피난 온 고려인 동포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숙식과 생필품을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서로 화합하고 도우면서 멋진 동포사회를 가꾸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힘.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을 서로 연결하고 동포들과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하고, 세계 어디에서든지 동포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尹 대통령, 폴란드 상·하원 의장 면담(7.13.) -尹 대통령, 엘주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양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환영 및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만족감을 표하였으며,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이 방산, 원전, 인프라와 같은 전략적 분야와 미래 첨단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폴란드 하원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 △폴란드 내 한국학 연구와 한국어 교육 진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尹 대통령, 그로츠키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 △미래 첨단 산업, 원전, 방산 등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 방안과 함께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 △현지 우리 기업의 노동허가, 거주증 발급에 대한 폴란드 의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 및 전염병 대응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 △보건, 의료, 통신, IT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폴란드와 협력해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폴란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 • 한·폴란드 정상회담(7.13.) [한·폴란드 정상 공동 언론 발표] -△양국 간 통상과 투자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G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교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하기로 합의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계획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올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하여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의 성과와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환영 -인프라 건설 부문의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1. (화)	한국	- 양국 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두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서로 연대해 나가기로 하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의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 - 북한의 ICBM 발사(7.12.)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 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도외시킨 채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규탄, △북한 불법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을 배가 • 尹 대통령,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참석(7.14.) -尹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 하나라며, 사상 최대규모의 방산 수출과 원전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 △한국의 배터리, 소재부품 기업들이 폴란드에 유럽 최대의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한 것처럼, 양국 간 협력을 항공우주, 스마트공장,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 △우크라이나 재건은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은 전후 복구사업 참여 경험이 많고 뛰어난 기술력이 있는 만큼, 폴란드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힘, △기후변화, 공급망 불안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한국과 폴란드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10년 간 양국이 에너지와 안보, 기술 등 전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해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 △폴란드는 내수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부유럽 최대 폴리프로필렌 공장을 차질 없이 적기에 성공적으로 건설하였고, 한국 조선사가 건조한 LNG 운반선으로 LNG를 운송해 오는 등 에너지, 방산,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올해 11월에는 인천과 브로츠와프 간 직항이 개설되는 등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중부유럽 12개국의 에너지, 교통,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위한 연합체인 3해 동맹체(3 seas initiative)에도 한국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성이 없고 국제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시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은 만큼 향후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에 나서자고 제안 - 이번 포럼에는 LG 구광모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LS 구자은 회장 등 대기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중소·중견기업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폴란드에서는 발데마르 두다 경제개발기술부 장관과 기업인 230여 명이 참석 • 尹 대통령,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 참석(7.14.) - 건설, 에너지, 수자원, IT, 철도차량, 건설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사업 여건 및 기업별 진출 전략 등을 전하는 한편,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 -尹 대통령,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강하게 요청한 바 있고, 폴란드 두다 대통령 역시 한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은 자유주의 진영의 선도 국가로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정부는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기업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 -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HD현대사이트솔루션, 현대로템, 유신엔지니어링, 네이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해외건설협회, 수출입은행 등 11개 기업·기관 참석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1. (화)	한국	• 민간 기부금 적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민간 기부금이 기탁된 당해 연도 경과 시 전액 기금 수입으로 귀속 및 정부 재정에 통합 운용되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한 기부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 상존 -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민간 차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함으로써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민간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 △통일부장관의 기부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 예정
	일본	•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산하 안전보장협력실 설치 - 지난 4월 창설된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OSA,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대해 안전보장 능력 및 역지력 강화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의 전략적 추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담당 부처 • 일본-폴란드 정상회담 개최(폴란드) - 법의 지배에 기초하여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강화를 위해 연계해나갈 것 - 우크라이나 및 인도태평양의 지역 정세에 대해 의논하고, 핵·미사일 문제 및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연계해 나갈 것을 확인
	기타	• 영국 정부, 우크라이나에 6천 465만 달러(약 84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발표 - 추가 지원분은 우크라이나 내 장비 보수와 군 재할센터 설립에 사용될 예정 • NATO 정상회의(리투아니아) 공동성명 채택 - NATO 소속 31개 동맹국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에 CVID를 재차 촉구. 한미일을 포함한 모든 관계국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인태지역에서의 사태 전개가 유로·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한반도 지역이 NATO 회원국에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파트너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을 비롯, 유로·대서양지역 안보에 공헌을 환영한다고 발표. 사이버방어와 기술, 하이브리드 등 공동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국제법규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한다는 공동의 약속을 이행할 것임을 강조 - 중국에 대해서 동맹국들은 상호적 투명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포함,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에 열려있으나,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규탄하는 것을 거부하는 동시에 대만을 위협하며 근원적인 군비증강을 하고 있다고 진단 -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대해 가입 신청국이 거쳐야 하는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embership Action Plan: MAP)'을 면제해주시기로 하는 등 가입을 위한 '패스트 트랙'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가입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젤렌스키 대통령 소셜미디어에 "전례 없고 터무니없다"며 반발 - 정상회의의 결과를 두고 상반된 의견과 분석 존재하나, G7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전까지 장기적 군사·경제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러시아의 재침략 방지를 위한 안전보장 협정 체결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
7. 12. (수)	한국	• 합참, "北, ICBM 고각 발사" - 오전 10시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고각(70~85도) 발사하였으며, 약 1000km를 비행해 홋카이도 오키시리섬 서쪽 해상에 낙하 - 최고 고도는 6000km를 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정상 각도로 발사 시 최대 사거리 1만 5000km로 미국 본토 전역이 사거리 - 비행시간은 74분으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역대 가장 비행임.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2. (수)	한국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尹 대통령,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급 NSC 상임위원회 주재 및 대응 방안 지시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7.18.(화) 개최 예정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지시
	한·미	•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개최(워싱턴 D.C., 7.12.~13.) -김성구 정책기획차장, 미국 리처드 존슨 핵·대량살상무기 대응부차관보 및 양국 핵·대량살상 무기 대응 관련 주요 직위자 참석 -양측은 △최근 북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한·미 공동대응의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 △북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태세 및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23년 화생방대응연습(Adaptive Shield, TTX)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연습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한반도 협력적 위협감소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프로그램의 추진 경과를 평가하고, 협력적 위협감소 (CTR) 적용분야를 확대하여 한측 조직·인력의 능력보강 및 전문성을 지속 강화 • 與지도부, 커트 캠벨 美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백악관에서 만나 “한·미동맹 강화로 北 ICBM 대처”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방미 대표단에 북한 ICBM 관련 긴급 브리핑 -이 자리에서 캠벨 조정관은 “한·미가 더욱 공고하게 안보동맹을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미·일이 어느 때보다 더욱더 긴밀한 협조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한·미·일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최근 북한이 한미 동맹의 공해상에서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한 데에 이어, 금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 • 한·미·일 합참의장(Tri-CHOD) 회의(하와이) -김승겸 합참의장, 마크 A. 밀리 미국 합참의장, 요시히데 요시다 일본 통합막료장과 3자 회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3자 협력 증진 방안과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지역 안보 도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밀리 합참의장은 대한민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 -회의 종료 무렵 발사된 북한의 ICBM 관련, 3국 의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3자 간의 의지표출과 협력의 중요성 강조
	미국	• NSC, “북 미사일 시험 규탄…한국 안보 보장 조치할 것” -애덤 호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 규탄한다”며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이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며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발표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런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으며, 평양은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외교적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
	중국	•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중국의 핵무기 관련 NATO 성명서는 진실과 완전히 반대되며, 냉전적 사고방식과 이데올로기적 편견의 산물…NATO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다’ -NATO는 배타적 블록을 결합하고, 집단 정치를 추진하여, 이념적 블록대결을 강화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2. (수)	중국	- 중국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침략하거나 대리전을 벌인 적이 없으며, 세계적인 군사작전을 벌이지도, 다른 나라에 무력 위협을 가하지도, 이념을 수출한 적도, 내정 간섭을 수행한 적도 없음...이러한 중국이 어떻게 NATO에 대해 시스템적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반문 - 아시아·태평양 버전의 NATO는 불필요 - 또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NATO의 공식 성명은 관계국의 군사적 억제제의 부정적 영향과 핵 비확산에 대한 이중 기준을 고려하지 않음...이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
	일본	• 기시다 총리,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해서는 안됨' • 기시다 총리-NATO 사무총장 회담,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 - △새로운 안전보장 과제, △기존의 안전보장 과제, △협력활동의 확대, △기본적 가치의 촉진 등 4가지 과제 16개의 협력 분야를 설정,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실행 - 기시다 총리,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하게 비난, 국제사회의 의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사무총장과 인식 일치 • 기시다 총리,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동선언' 출범식 참석(리투아니아, NATO 정상회담 계기) - G7정상들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참석 - G7국가는 현재의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미래의 러시아에 의한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군사력을 확보, 에너지 안전보장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경제적 번영 촉진을 가져오는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부흥·복구에 착수, 우크라이나의 굶주림을 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혁아젠다의 실시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 - 우크라이나는 파트너의 안전보장과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설명책임조치를 강화 • 기시다 총리, 리투아니아(7.12.), 뉴질랜드(7.12.), 스웨덴(7.12.), 체코(7.12.)와 각각 정상회담 개최(리투아니아, NATO정상회담 계기)
	러시아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방중을 추진 중이며, 지금이 러시아와 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적기라고 발표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에 앞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이 러시아를 지배하려는 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발언
	UN	•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푸틴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을 위한 방안 제안 - 흑해 곡물 협정으로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 곡물, 비료의 해상 수출이 가능...곧 만료 예정(7.17.) - 사무총장은 흑해 곡물 협정의 지속적 가동 필요성에 러시아 농업은행을 통한 금융 거래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동시에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계속 수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러시아 농업은행의 자회사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시스템이 재연결해주는 것을 대가로 협정 연장을 제안한 것으로 보도
	기타	•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리투아니아에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 파트너국 정상회의(AP4)' 모두발언에서 동아시아 및 한반도 안보 중요성 강조 - NATO가 북한의 ICBM 발사를 주시·규탄하며, 중국의 군비증강, 핵확장 및 현대화에 대한 우려 표명 - 아시아의 안보가 유럽에 중요함을 강조하고, NATO는 지역안보 기구나 글로벌 차원에서 직면한 도전이 서로 연결돼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단결을 강조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2. (수)	기타	• NATO, 러시아 접경 지역인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이 나토 훈련 및 기타 항공 활동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공 협력 선언문'에 합의했다고 발표 -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 협약은 NATO의 원활한 다국적 공군 훈련 추진을 위한 각국 군 당국과 민간 항공 분야 간 협력 극대화를 목표...발트 3국이 러시아를 마주한 NATO의 동부 최전선 국가라는 점을 고려,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방공 훈련에 더 집중할 것으로 관측
7. 13. (목)	북한-대내	• 김정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 지도(7.12.) 보도 - 미사일총국은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적대세력들의 위협천만한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정당방위권 강화의 일환”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하에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진행하였으며, 미사일은 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 - 시험발사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도발행위가 전례없이 가증되어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안보 형세가 랭전시대를 초월하는 핵위기 국면에 다가선 엄중한 시기”에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적 판단과 중대결심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보도하고, 구체적으로 ‘워싱턴 선언’, 한·미 핵 협의그룹,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지적 -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세력들에 의해 한반도 안전환경이 엄중히 위협받고 있는 현 정세는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노선 관철에 더욱 분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라고 확인 • 직맹 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7.12., 화상회의) 보도 -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직맹의 상반기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제8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법을 논의 -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점령을 위한 사회주의 애국운동·대중운동에 대한 지도와 총화를 정확히 할 것,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고 더 많은 전투기술 기재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수도건설 전역에서 헌신할 것 등을 강조
	한국	〈 박진 외교부장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 한·인도 외교장관회담 - 양 장관은 △양국이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로 대표되는 방산협력은 물론, 디지털, 바이오 헬스, 우주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 및 안정적인 국제 공급망 유지·확보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 △양국 간 공유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 확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선하면서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하는 등 호혜적인 혜택을 창출 - 박진 외교부장관은 인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합당한 관세 부과 기준이 적용되도록 자이산카르 장관의 관심을 당부 - 양 장관은 7.12.(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태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 •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 양 장관은 △양국 관계, △지역 및 한반도 정세, △인태 전략, △실질 협력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3. (목)	한국	-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방·방산, 핵심광물 공급망, 사회·문화 협력 등 양국간 논의되었던 현안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언급 - 양 장관은 7.12.(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태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 • 한·일 외교장관회담 - 양 장관은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연내 재개를 위한 조율, △7.12.(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한·일·중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 박진 외교부장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정상 간 논의한 대로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이상상황 발생시 방류중단 및 우리측 즉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남북자·역류자·국군 포로 등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 강조 •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 박진 외교부 장관, 제26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한·아세안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 △아세안이 역내 성장의 중심(Epicentrum of Growth)이 될 수 있도록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양측 간 실질협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국방·방산,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등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 - 박 장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의 구체내용이 확정되었음을 설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아세안측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 △7.12.(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금일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동 발사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신속히 발표하여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높이 평가,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당부, △우리 정부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아세안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박 장관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역내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박 장관과 아세안 장관들은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여 양측 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로 격상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 아세안+3(한·일·중) 외교장관회의 - 참석자들은 올해 의장국 주재인 「아세안의 중요성: 성장의 중심(ASEAN Matters: Epicentrum of Growth)」을 바탕으로 역내 안정적 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미얀마 등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 - 박 장관, 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 확대’ 차원에서 무역·공급망 안정, 금융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하 공급망 협정이 최근 타결된 것을 평가하고, 무역 촉진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의 상호 보완적 효과를 강조, △아세안+3 회원국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한 통화 다양화 등 최근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체제(CMIM)의 실효성이 강화되었다고 평가, △지난해 개소한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 나갈 것을 기대 - 미래 위기 대비 ‘회복력 강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올해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에 4,500톤을 기여, △아세안 국가 대상 바이오 인력 양성 교육 및 K-Health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해 국별 맞춤형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3. (목)	한국	- '미래 혁신' 측면에서,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에 기반한 역내 기후 협력 및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을 소개,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 간 교류 활성화 계획에 대해 설명 - 박 장관은 7.12.(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동 발사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 금일 아세안 외교장관 성명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반도 정세 관련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 미얀마 문제 관련, 박 장관은 상황 악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의장국 리더십 하에서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우리 정부가 최근 사이클론 '모카' 피해에 대한 50만불 지원과 함께, 미얀마 국민과 난민들을 위해 53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신규로 제공할 것임을 강조 • 한·EU 외교장관회담 - 박진 외교부 장관,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한-EU 관계,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협의 - 양측은 첨단 기술 분야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활발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만족을 표하고, 향후 공급망 안정, 해양안보 등 여타 분야에서도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안보 파트너십 구체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1차 외교장관 간 전략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 - 박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7.12.(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국제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 -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양측은 향후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 박진 외교부 장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자 국가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 존중이라는 국제질서의 근본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임을 강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및 세계 경기회복의 핵심임을 지적하면서, 규칙 기반 질서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 △미얀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세안 5개 합의 사항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미얀마 국민과 난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밝힘. - 박 장관은 △7.12.(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동 발사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 아세안 외교장관 성명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작년 이래 전례 없는 빈도로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은 다수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지적,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EAS 차원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확고함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대응,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등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자금원을 차단 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 필요성을 강조 - 박 장관은 EAS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정상포럼으로서의 EAS가 역내 다양한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 •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 중 중앙정치국 위원 회담 - 양측은 지난해 11월 G20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3. (목)	한국	한 정상 간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음. - 양측은 정상·외교장관 등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전략 대화, △차관급 인문교류촉진위,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양국 간 소통과 교류 강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인적교류 확대,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실질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박 장관, 7.12.(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는 것은 한중 간 공동이익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측의 건설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양측은 북핵 문제 관련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였음. - 양측은 한·일·중 3국 간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장관 및 정상회의 등 3국 협력 협의체의 재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다양한 글로벌 이슈 대응에 있어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음.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 참석국들은 지난 30년간 ARF가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국가들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역내 긴장완화와 분쟁예방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정세 이외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미얀마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 - 박 장관, △7.12.(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의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점을 강력히 규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지 하루만에 아세안측이 외교장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ARF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것임을 강조,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음을 상기하며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낭비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 인권 개선 및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주민 인권 개선 및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 - 박 장관, 급변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개방성, 투명성, 예측성에 기반한 역내 질서 구축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ARF의 비전과 역할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하면서, 이를 위해 내년에 제16차 ARF 전문가·저명 인사 회의(EEPs)를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소개 •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 박진 외교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한·미·일 간 공조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 - 3국 장관은, △7.12.(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지속 강화, △물샬틈없는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 인권 문제 관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박 장관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역내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고,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한·미·일 협력이 정상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복원되고 강화되었다고 평가 - 3국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개최될 차기 한·미·일 정상회담이 3국 간 포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3. (목)	한국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한·미·일 3국이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여지가 크다고 하고, 올해 초 출범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중심으로 3국 간 협의를 통해 AI 등 첨단기술, 공급망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대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을 굳건하게 지지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해양안보 역량 강화,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과 메콩 국가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동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는 만큼, 안보리 내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갈 것을 합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제공을 포함하여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 - 양 장관, 2024년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활발한 고위 인사 교류 추진과 함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 △방산,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 주요 실질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합의, △필리핀 군현대학 사업 및 원전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통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 - 박 장관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의 중점 협력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해양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한-필리핀 간 협력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마닐라 장관은 이를 환영 - 양 장관은 7.12.(수) 북한이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 - 박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마닐라 장관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 박 장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필리핀의 지지를 당부 • 한·영 외교장관회담 - 양 장관은 원전·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지속·확대 하며 양국 간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음. - 양 장관은 7.12.(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 △박 장관은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당진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이 끔찍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하고, 양 장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 하기 위한 양·다자적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클레벌리 장관, 아시아 지역에서 영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 국가인 한·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환영하며 앞으로 한·일 양국과 인태 지역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 - 양 장관은 한·영 프레임워크를 업그레이드하여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음. - 박 장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입후보에 대한 영국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
	한·미	•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 - 미국 공군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국 공군 F-15K, 미국 공군 F-16이 참가하여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편대비행 실시
	미국	• 미국·인도네시아, 전략대화 개최 및 공동성명 채택(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제도적 연결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인 수단에 대해 의견 교환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3. (목)	미국	- 특히 경제 협력 강화, 공급망 강화, 에너지 전환 촉진, 해양, 보건 및 국방 협력 강화에 초점 - 또한 2024년 미국-인도네시아 수교 75주년을 기념하여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성명을 채택 • 미·일·필리핀 외교장관 회담(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SEAN 외교장관회의의 계기) -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강화를 위해, 동맹국·동지국과의 중층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해양안전보장분야를 포함한 3국 협력 환영
	중국	• 중·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왕이 당 중앙위 외사판공실 주임 참석 - 우호협력 증진, 개방적 지역주의 견지, 새로운 협력 잠재력 발굴, 글로벌 리스크 대응,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한 공동 노력 필요 • 美 블링컨 국무장관-왕이 당 중앙위 외사판공실 주임 회담(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SEAN 외교장관회의의 계기) - 美, 이견을 인정하되 소통을 강화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 中, 미·중 관계의 안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혼란을 배제해야 함...중국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 및 주권·영토 훼손 반대, 경제·무역·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억압 중단, 중국에 대한 불법적이며 부당한 제재 해제 • 중·러·인도네시아 3자회담 개최(7.1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SEAN 외교장관회의의 계기) - 3국은 다자주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함. -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공급망 유지에 대한 의견 교환 및 개도국의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보장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필요 • 중·인도 외교장관 회담(7.1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SEAN 외교장관회의의 계기) -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국경문제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령관급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합의
	일본	• 일·아세안 외교장관회의(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아세안 외교장관들, 남중국해에서의 항해·비행의 자유의 중요성,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중요성, 한반도 비핵화 및 납치문제 해결의 중요성 발언 - 日 외교장관, 모건 국가가 주권·영토일체성을 존중하는 국제현장의 원칙을 지킬 것, 대립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국제법 및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항구적 평화를 지지, 세계 어디에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시도를 용인해서는 안될 것,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킬 것을 강조 • 말레이시아(7.12.), 동티모르(7.12.), 호주(7.13.), 브루나이(7.12.), 인도네시아(7.13.), 몽골(7.13.)과 각각 양자회담 개최
	일·EU	• 제29회 일본·EU 정기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개최(벨기에 브뤼셀) - △안전보장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대화 창설, △수소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식량안보의 중요성 확인, △중국에 대한 공통의 우려 확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할 것을 요구, △북한의 활발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납치문제 등 북한에 대해 긴밀히 연계할 것을 확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동지국 간의 결속을 지속할 것, △EU의 일본 식품 수입규제 철회
	러시아	• 푸틴 대통령, 국영 로시아24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전체적으로 세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국제 무대에서 추가 긴장을 야기할 것이라 경고 • 세르게이 라프롭 러시아 외무장관, NATO의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 지원을 러시아에 대한 '핵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3. (목)	러시아	- 자국 인터넷 매체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러시아의 핵 사용 조건이 군사독트린에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회피 • 러시아 국방부, 해상 및 수중 드론을 활용한 우크라이나군 공격 등을 방어하기 위한 해군 함정 현대화 추진
	UN	• 북한의 '화성-18형' 발사(7.12.) 관련 UN 안보리 공개회의 개최했으나 성과없이 종료 - 미·영·일의 요청으로 소집...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과 북한 대사로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가 - 제프리 드로렌티스 미국 차석대사 대리는 중러를 향해 2개 이사국의 반대로 안보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단합을 촉구했으나, 장진 중국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미국의 위협 탓이라고 옹호하며 미국의 한반도 주변 연합훈련을 비판. 안나 에브스 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 또한 러시아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활동 일체를 반대한다며, 미국의 활동이 동북아와 아태 지역 안보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7. 14. (금)	북한-대내	•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 기념 중앙연구토론회 진행(7.13., 인민문화궁전) 보도 -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미 해군 정찰기 EC-121 격추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한·미 합동군사훈련 틴스피리트 실시에 대응한 준전시상태 선포 및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등을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으로 제시 - 모든 일군과 근로자들이 국가방위력 건설을 최우선시하여 공화국의 무장력을 더욱 불패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제1혁명과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승에 못지 않은 위대한 승리들을 계속해서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
	북한-대외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화성포-18》형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비질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주장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화성포-18》형 시험발사 관련 공개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미국과 서방에 완전히 얻어진 신형전기구라는 것을 유감없이 증명해보였다”고 비난 - “미국상전이 하는 짓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데 습벽화된 어중이 떠중이들이 장외에서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반공화국 《공동성명》 발표 놀음에 합세한 데 대해 경종을 울린다”며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의 대북 규탄 공동성명에 대해 비난 -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공화국 노선을 포기할 때까지 가장 압도적인 핵억제력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
	한국	• 박진 외교부 장관, 北 대표 발언 정면 반박 “ICBM을 발사해놓고 어떻게 주변국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거냐, 기관총을 쏘고 나서 안 맞았으니 당신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바와 다를 바 없다”(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는 北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참석국에 강조하기 위해 “말 앞에 마차를 놓는 격”이라고 표현 - ARF 회의는 남북 대표가 나란히 참석하는 사실상 유일한 다자회의로, 남측에선 박진 장관이, 북한에선 최선희 외무상을 대신해 안광일 주아세안대표부 대사가 자리 • 외교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 - 북한의 7.12.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 -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정경택, 박광호)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박화승, 황길수)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4. (금)	한국	- 기관 3개는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 회사로서 기계 등 금수품 거래(철성무역회사),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으로서 북한 조형물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조선백호무역회사, Congo Aconde SARL)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 - 이번 지정 대상은 미국 또는 EU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으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
	미국	• 상원 외교위, 주미 홍콩사무소 폐쇄할 수 있는 '홍콩경제무역사무소(HKETO) 인가법안'을 통과 -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미 국무부의 홍콩 자치 수준 연례평가 시 주미 HKETO가 외교적 특권을 유지 또는 상실해야 하는지를 의회에 설명 필요 - 향후 홍콩 자치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워싱턴DC,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에 있는 3곳의 HKETO의 특권과 면책권이 종료되거나 사무실이 문을 닫게 될 수 있는 상황
	중국	• 중국-솔로몬제도 정상회담 개최 및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체결 - 인적 교류 확대, 일대일로 협력 강화, 문화·교육·건강·스포츠·여행·청년·싱크탱크·미디어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강화, 법의 집행과 안보문제에 대한 협력강화, 국제사회 및 지역사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강화, 인류 공공의 가치에 대한 옹호 - 태평양 제도 국가의 평화, 발전,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 중국은 태평양 제도 국가에 대해 '4가지 존중(△주권과 독립, △의지, △문화와 전통, △단결을 통한 강화)'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 • 전국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공작회의 개최(7.14.~15.) - 시진핑 주석, '당의 인터넷 관리를 견지...법에 의거해 인터넷을 관리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 업무를 처리하고, 법에 의거해 인터넷에 접속해야 함'
	중·일	• 中 왕이 당 중앙위 외사판공실 주임-日 하야시 외무상 회담(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SEAN 외교장관회의 계기) - 中, 일본은 '중국위협론'을 버리고 중국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해야함...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는 해양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일본은 다양한 전문가와 과학적 검증방식에 마주해야 함. - 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중국과 과학적 관점에서 의사소통 할 의향 전달...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러시아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기자들과의 전화회의를 통해 바그너그룹 등 용병기업의 지위를 정할 법적 검토의 필요성 발표 - 앞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와 인터뷰에서 민간 군사조직(바그너 그룹 지칭)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들 기업의 법적 틀을 논의하는 것은 러시아 의회와 정부에 달린 일이라고 발언
7. 14. (금)	기타	• 올라프 솔프 독일 총리, 베를린 연방 기자회견장에서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2027년까지 170억 유로(약 24조 원) 상당의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 독일과 NATO의 인태지역 관여와 관련 질의에, 세계를 전체로 보아야하며, 공동의 안보를 위해서는 NATO에 초청된 한국과 일본 등 아태 4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 독일 정부, 대중국전략 발표 -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위험감소(de-risking)를 지향 - 중국이 체제 라이벌로서 일당독재 체제의 이익에 의거해 국제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데에 우려...중국은 인권상황을 상대화하는 등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근본을 흔들고 있음. -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태는 유로·대서양 지역 안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인도·태평양의 긴밀한 파트너들과 안보 정책적·군사적 협력을 확대할 것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4. (금)	기타	- 중국 정보기관의 현실과 디지털 공간에서의 첩보활동에 단호히 대응할 것 - 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위험감소와 의존성감소라는 이름으로 보호주의를 실행하고,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위험을 초래하는 일...중국과 독일은 많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
7. 15. (토)	북한-대내	•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평안남도 증산군 현지요해 - 풍정농장, 무본농장, 농기계작업소, 식료공장, 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 등 방문하여 당중앙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 집행 실태 요해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진행 - 중앙은행법, 전자결제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할 것에 대한 결정 채택
	한국	• 尹 대통령, 폴란드 순방 직후 우크라이나 방문 및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 [尹 대통령 모두 발언] -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우크라이나의 군인들과 전쟁으로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 그리고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애도”...“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자유, 인권, 법치 기반인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 - “저와 우리 국민은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국권을 회복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 • [한·우크라이나 공동언론발표문] -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 -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한국은 주요 개도국들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자유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 -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 지속”...“인도적 지원 물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지난해 약 1억불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 5천만불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 - “지난 5월 양국 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불의 사업기금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우크라이나 내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 신설”
	러시아	• 러시아 외무차관, 북한이 발사(7.12.)한 ICBM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 - 외무차관은 이번 발사에 대해 북한이 국방력을 강화하도록 실질적으로 도발한 미국과 동맹들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라고 북한을 옹호
7. 16. (일)	한·미·일	• 한·미·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방어훈련 - 韓 울곡이이함과 美 존핀함, 日 마야함 등 한·미·일 3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 - 北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에 3국 함정이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
	미국	• 국가안보보좌관, “북, 7차 핵실험·추가 미사일 가능성 우려”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 - 또한 “이번 실험 이후는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전제 조건 없이 핵 해법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6. (일)	일본	• 기시다 총리,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연합국·카타르 방문 - 일·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일·사우디 비전 2030의 2막으로 첨단산업, 의료, 헬스케어 분야 협력 강화...그린에너지 협력을 위한 일·사우디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구체적 협력 안전 검토'(7.16.) - 일·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정상회담,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기반, 기존 에너지 분야 뿐만 아니라 우주산업에서도 협력 강화...기후행동에 대한 일·UAE 공동성명 발표...지난 5월 체결한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에 기반하여 방위분야에서의 협력강화'(7.17.) - 일·카타르 정상회담, '포괄적 파트너십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킬 것에 대한 의견 일치'(7.18.)
	북한-대내	• 김덕훈(내각총리) 황해남도 은률군·온천군, 평안남도 증산군, 남포시 온천군 농장 현지요해 - 사리원보이라공장, 룡강석재가공공장, 사리원시량정사업소 요해
7. 17. (월)	북한-대외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조선중앙통신) - “《전제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세우기 위한 술책이 깔려”있고, 협상 테이블에는 “《CVID》 따위에 불과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을 소리”임. - “확장억제체제를 더욱 강화할수록, 위협적인 실체인 군사동맹체제를 과도하게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기 때문에 “안보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건드리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어야” 함.
	한국	• 통일부, “北, 공유하천에 대한 댐 방류 통보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정례브리핑)
	미국	• 국무부, 尹 우크라 방문 환영 표명...“모든 국가가 우크라 지원하길”(브리핑) -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표명을 환영한다”고 답변 - 이어 “우리는 다른 외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정부 구성원들과 직접 대화하고, 러시아가 가한 피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한다”고 언급 -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규탄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슈”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기를 바란다”고 답변 • 국무부, 대만 부총통 美경유에 “일상적...中 도발명분 삼지 말라”(브리핑) -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의 차기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이 8월 중순 미국을 경유해 파라과이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 “이동 거리를 고려할 때 경유하는 것은 일상적”이라면서 “지난 수십 년간 10명의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했다”고 답변 - 이어 “중국이 이를 도발적 행동의 명분으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며 현상을 변경할 의도가 없다”고 부연
	미·중	• 미·중 기후특사 회담(중국 베이징) -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세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 - 케리 특사,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석탄 화력발전의 기후변화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인간이 만든 인류 공동의 위험, 위협, 도전에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 사흘 안에 중대한 진전이 이뤄지기를 우리는 희망한다”고 언급 - 세 대표, 실질적인 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7. (월)	중국	• 시진핑 주석, 두테르테 前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베이징),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 대한 중요성 확인
	러시아	• 러시아, 흑해곡물협정 이행 종료 발표 - 전쟁 중에도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해온 흑해곡물협정은 2022년 7월 UN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체결되었으나 러시아가 종단을 선언 - 자국 요구가 수용될 경우 협정에 즉각 복귀할 것이라며 협상을 위한 여지 언급
7. 18. (화)	한국	• 윤 대통령,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NCG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높아…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 - 윤 대통령,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北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北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 • 대통령실, “우크라이나 아동복지 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 공유 지원 제공” -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의 인도지원 중 아동 지원의 한 부분으로 아동심리치료 관련 필요한 자원과 프로그램 공유 등 지원을 제공 - 지뢰탐지기와 지뢰제거 지원을 더욱 확대 예정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北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있기 전에는 남북 간에 의미 있는 경제협력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 “남북경협은 北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北 주민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초기 조치로서의 협력은 가능”할 것이고 “이후 北 비핵화 진전 단계에 맞추어 남북공동경제 발전계획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 • 외교부, “北,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정례브리핑) - 北 김여정 담화 관련, “한·미 양국은 北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담대한 구상’에 따라 北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정치·경제·군사적 분야를 포괄하는 상응 조치를 제공할 준비가 돼”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日 나가노현에서 개최 예정, 北의 의도적인 긴장조성과 도발 행위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 공유, 대응방안 협의 예정” - 北 ICBM에 대한 ARF 의장 성명 관련,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단호한 규탄 입장을 발표, 채택된 4개의 성명에는 과거와 달리 남북 양측의 상호 자제 등 양비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특징, 아세안 측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작년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올해는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한 차원 더 높게 격상한 것도 큰 의미”
	한·미	• 한·미 핵협의그룹(NCG), “美와 동맹국에 대한 北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 -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에 韓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美 커트 캠벨 NSC 인태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이 주재했으며, 이외 양측 NSC, 국방부, 외교부 및 군사당국 관계자들이 참석 - “한·미 양국은 韓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 -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 -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8. (화)	한·미	- “이번 NCG 출범 회의는 美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韓에 제공한다는 美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美 측에 부여” -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 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과 개발 등 다양한 업무 체계 확립
	한·중	•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 - 中 왕이 주임 양자회담 관련 “北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정례브리핑) - 박진 장관, “北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는 것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미국	• 국방부 장관, JSA 견학하던 미군장병 월북 확인 -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서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JSA 견학 중 고의로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답변 • 인도·태평양사령부, 北탄도미사일 도발에 “직접적 위협 아냐...동맹과 긴밀 협의” - 인태사령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발사가 미국 영토와 국민, 동맹에 대한 직접적 해가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이는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저해 행위를 부각한다”고 강조 • 국무차관보 “北과 평화협정보다 핵·미사일 위협에 집중해야” -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원하느냐는 브래드 셔먼 의원의 질의에 “솔직히 말해서 평화협정보다는 당장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미·중	•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특사 방중, 왕이 당 중앙위 외사판공실 주임, 리창 총리 접견 - 美, 미·중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중국과 협력하여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에 대응해나갈 것 - 中, 안정적인 중·미관계를 추구하고,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 추진
	중국	• 중국-알제리 정상회담 개최(중국 베이징)
	UN	• UN 안보리, 인공지능(AI) 관련 첫 회의 개최 - 구테흐스 사무총장, AI의 군사적·비군사적 응용 모두 세계 평화 및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UN 산하 AI 감시 기구 창설에 대한 지지 표명 - 드미트리 폴란스키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안보리가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유지하는 기구로서 AI를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
	기타	• 인도·태평양 외교장관들, 북한의 화성-18형(7.12.) ICBM 발사에 우려 표명하는 ARF 의장 성명 채택 - 제1회 중국-아랍 정상회담 결과 이행 가속화, 8대 중국-아랍 실무협력 이니셔티브 증진 - 농업, 교통, 과학기술, 통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무역, 항공우주, 검역, 에너지, 교육, 스포츠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문서 서명
7. 19. (수)	한국	• 尹 대통령 부부, 외국 정상 최초로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美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센터기함 승함 후 해군작전사령부 방문 - 尹 대통령, “이번 센터기함의 전개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준 것” - 해당 방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 - 尹 대통령,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그룹(NCG),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北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19. (수)	한국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통일부를 외교부와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이러한 헌법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부처로 외교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목적과 역할이 있어” -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미·북, 일·북 간 대화를 지지” • 국정원, “北이 지난해에만 해외 거래소에서 9천억 원에 육박하는 가상자산을 탈취” (기자간담회) - “北이 제8차 당 전원회의에서 위성 재발사와 핵미사일 역량 증강을 천명, 우리나라와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우주·방산 분야 해킹이 많아져” - “국제사회의 저지에도 北은 가상자산의 탈취와 현금화에 집중할 것” - “해커들이 수주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전체 외화벌이 금액의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 - “北 사이버 공작의 핵심 역할을 했던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가 최근 통일전선부 고문 직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에 복귀한 점 주목, 그가 이끄는 대규모 사이버 도발이 우리 사회를 혼란케 만들 가능성을 우려” - “우리 총선 및 美 대선 등을 앞두고 의식이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이버상 영향력 공작이 본격화할 가능성” - “北뿐 아니라 中, 러시아도 필요에 따라 총선에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 합참, “北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포착” - 대통령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 日 방위성, 3시 29분 발사 미사일은 최고고도 약 50km, 비행거리 약 550km, 3시 45분 발사 미사일은 최고고도 약 50km, 비행거리 약 600km • 신범철 국방부 차관, “美 병사 자진 월북”(SBS 라디오 인터뷰) - “병사가 美 본토로 송환 예정이었는데 무단으로 넘어간 것”이라며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월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미·중	• 美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방중, 시진핑 주석, 왕이 당 중앙위 외사판공실 주임과 회담 - 키신저 전 국무장관, ‘상하이 공동성명이 확정한 원칙을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미·중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 시진핑 주석,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기초 위해서 중·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 시킬 것...중·미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되돌리기 위하여 건설적 역할을 부탁’ - 왕이 주임,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미국의 대중정책은 키신저식의 외교적 지혜와 닉슨식의 정치적 용기가 필요’
	러시아	• 푸틴 대통령, 남아공 BRICS 정상회의 대면 참석 - 남아공 대통령실, “상호 협의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BRICS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음을 사전 공지 없이 언론 성명으로 발표 - 푸틴 대통령에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남아공은 ICC 회원국으로 푸틴 대통령의 입국 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 소지 • 러시아, 흑해곡물협정 복귀 관련 강경 입장 고수 - 흑해곡물협정의 일부인 자국 곡물·비료의 수출 제한 해제 조건 불이행시 협정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 - 푸틴 대통령은 내각 회의(7.19.)에서 러시아 곡물·비료 수출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업 분야와 관련 러시아 자산의 동결 해제, 러시아 식량·비료 수출과 관련된 러시아 은행 및 금융기관들에 대한 모든 장애 제거, 해당 은행들의 즉각적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재가입 등을 주문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20. (목)	북한-대내	-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개막(7.19., 인민문화궁전) 보도 - 리일환(당중앙위 비서), 리영식(내각당위원회 책임비서), 최희태(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 및 박경철(문화성 부장) 개막사
	북한-대외	- 강순남 국방상 담화(조선중앙통신) 18일 한미 핵협의그룹회의 개최 및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은 “가장 로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 감행”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격돌 국면은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 “미국과 졸개들의 미친 짓을 철저히 억제, 격퇴함”으로써 국가의 주권, 영토완정,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핵전쟁 방지를 위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
	한국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1년 임기 연장, “北인권개선 정부차원의 강한 의지 표명”
	한·미·일	- 한·미·일 북핵수석협의, “北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비판하며 불법 자금줄 차단 방안 등을 논의”(일본) - 성 김 美 대표, “(무단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관련) 킹의 안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의 안전과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중국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오데사 폭격으로 중국 영사관 일부 파손 - 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고 관계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라고만 대답하고, 러시아에 외교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응답
	중·러	- 중·러, 동해에서 군함 10여척과 군용기 30여대를 동원하여 ‘북부·연합-20232’ 훈련 진행(7.20.~23.) - 양국 해군은 해상·해안·공중 목표물에 대한 합동 포사격을 포함 약 20차례의 전투 훈련을 실시...일본 자위대, 이에 대응해 호위함과 초계기로 감시
	일본	방위성, 오키나와현 최동단 기타다이토섬에 항공자위대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 배치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
	기타	- 벨라루스 국방부, 러시아 용병단 바그너그룹의 용병들이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벨라루스 특수 부대와 합동 훈련 발표 - 폴란드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폴란드의 국경은 안전하고 동부 국경의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황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발표
7. 21. (금)	북한-대내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 경축 전쟁로병 및 노동계급, 직맹원 상봉모임 진행(7.20., 중앙로동자회관) 보도
	한국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통일부가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은 정보분석이라고 생각” “우선 北 내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른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갈 생각” “北 주민의 어려운 인권 상황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하고 北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에게 통일교육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 “‘우리민족끼리’보다는 ‘국제공조’를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 - 국방부, “北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 (‘北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입장’) -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는 北의 위협에 “北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반박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21. (금)	한국	-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北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 위협이 아니야” - “한·미가 이번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
	한·미	• 한·미 북핵대표,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을 외부에 돌리는 北에 깊은 유감” - 외교부, “北이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하고 미사일 도발만 지속하면서도 모든 긴장 고조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 - 최근 北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고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 연합 억제·대응 태세 제고 노력을 강화
	러시아	• 푸틴 대통령, 정례 국가안보회의에서 벨라루스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 -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그룹의 벨라루스 이동 후 긴장 고조 와중 폴란드를 비난하며, “폴란드가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와 연합 무대를 창설해 우크라이나 서부의 안보 보장을 목표로 한다지만, 해당 영토의 후속 점령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 - 폴란드 정부는 바그너그룹과 벨라루스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벨라루스 접경 지역과 가까운 동쪽으로 병력을 더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벨라루스군과 바그너그룹의 합동 훈련은 명백한 도발로 간주한다고 경고 • 러시아 외무부, 자국 내 영국 외교관들 장거리 여행 제한 조치 - 외무부는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영국 내에서 러시아의 외교 행위를 방해했다며 러시아에 대한 영국의 적대적 행위에 따른 대응 차원의 조치라고 발표…영국 대사관 측은 답변을 거부 - 영국 측에 향후 대사관 소속 직원들이 반경 120km 이상 이동할 경우 최소 5일 전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여행의 시기, 목적, 방식, 예정된 접촉 대상, 동반자, 이동수단, 방문 장소와 숙박시설, 여행 경로 등 세세한 정보를 사전에 러시아 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UN	• UN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UN 고위관리들과 미국, 유럽 등 서방 외교관들, “인류 안전국”이라며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중단을 맹비난 - 러시아 측은 은행결제시스템 재개 등 실질적 제재 해제 선결을 주장하며 반박
	기타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흑해곡물협정을 복원할 수 있다고 강조…서방이 러시아의 요구를 고려할 것을 촉구 • EU,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 등으로 곡물 수출에 비상이 걸린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두고 의견차 -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와 근접한 동유럽 회원국들이 국경 개방 등을 통해 수송을 용이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기여를 강조한 반면,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 농업계 보호가 우선이라며 의견 충돌 - 폴란드는 EU의 동의 없이도 수입 금지 연장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며, 우크라이나산 물량 운송 시 경유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EU에 주문
7. 22. (토)	북한-대내	•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 경축 관련 행사 진행 - 전쟁로병, 녀맹일군, 녀맹원의 련환모임 진행(7.21., 녀성회관) 보도 - 영화상연 주간 개막(7.21., 평양국제영화회관) 보도
	한국	• 합참, “우리 군, 4시께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22. (토)	일본	• 기시다 총리 ‘레이와 국민회의’ 행사 연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이웃 국가를 침략하는 현 상황에서 국제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필요’
	기타	• 엔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일방적 파기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 -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식량을 무기화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트윗하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NATO 동맹들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
7. 23. (일)	한국	• 국방부, “美 아나폴리스함이 오늘 오전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교류 활동 예정” (정례브리핑)
	일본	• 경제산업성, 외환법 관련 정령 개정에 따른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 규제 강화안 시행 - 첨단 반도체 관련 23개의 품목에 대해 우호국으로 지정된 42개국을 제외하고는 개별허가 필요 - 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시장경제, 자유무역, 국제경제무역 규칙 위반”
7. 24. (월)	한국	• 통일부,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검토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 (정례브리핑) • 합참, “北이 동해상으로 심야에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	• 백악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하고 대화 복귀 촉구(정례브리핑) -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우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 -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화 참여를 촉구 • 국무부, “北, 유엔사 메시지 받은 것은 인정...실질적 소통은 없어(정례브리핑) -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 킹 이병 신변과 관련, “북한과 어떤 실질적인 소통도 하지 못했다”면서 킹 이병의 소재를 확인하고 그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북한에 접촉했으나, 어떠한 실질적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답변 - 이어 유엔군사령부(UNC, 유엔사)가 JSA에 설치된 소통 라인을 통해 북한군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소통은 초기에 있었고 지난주 이후 새로운 연락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언급 - 또한 북한이 어느 쪽에도 응답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유엔 쪽과 관련해서는 내가 이해하기로 북한이 (유엔사) 메시지를 받았다는 걸 인정했다”며 “그것을 실제적인 응답으로 여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결정하도록 두겠다”고 답변
	러시아	• 푸틴 대통령, 크렘린궁이 발표한 보도문을 통해 서방의 제재에도 아프리카에 곡물과 비료를 계속 수출하겠다고 발표 - 러시아가 아프리카에 우크라이나 곡물을 상업적으로나 무료로 대체할 수 있는 확신을 주고 싶다고, 흑해곡물협정이 애초 목적과 달리 미국과 유럽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고 비판
7. 25. (화)	북한-대내	•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 경축 관련 행사 진행 - 국가미술전람회 개막(7.24., 옥류전시관) 보도 - 전쟁로병들과 청년학생들의 상봉모임 진행(7.24., 청년중앙회관) 보도 - 직충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기동예술선동대 합동공연 진행(7.24.,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문화회관) -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와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 진행(7.24., 장천문화회관) 보도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25. (화)	한국	• 통일부, “北 국경개방 시간문제”(통일부 당국자 인터뷰) - “北이 최근 전반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조처를 했고, 국제스포츠행사 참가를 준비하는 동향 등으로 볼 때 어느 정도는 (국경 개방이) 시간문제” • 합참, “北 탄도미사일,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정례브리핑) - “北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400여 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 -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정치 일정과 관련하여서 인원과 장비 식별 등 관련 지역에 대해서 면밀히 예의주시” - 日 방위성, 23시 54분 발사 탄도미사일은 최고고도 약 100km, 비행거리 약 350km, 23시 59분 발사 탄도미사일은 최고고도 약 100km, 비행거리 약 400km
	한·일	• 日 정부, 韓 정부에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설명회 개최(일본 도쿄) - 日 외무성 군축비확산·과학부장, 자원에너지청 원자력사고 피해대책심의관 등 참석, 韓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등 참석 - 日, IAEA 리뷰에 더해 일본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정보를 투명하고 빠르게 공표할 것을 전달
	미국	• 美, 중·러 대표단 방북에 “北 안보위협 억제 역할해야”(정례브리핑) -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의 6·25 정전협정기념일 행사 참석차 방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여러 차례 중·러가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인 위협 고조 행위 중단을 설득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답변 - 또한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과 관련해 북한 측의 응답이 여전히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킹 이병의 안위를 포함해 구금 여부 등에 대해 어떤 새로운 정보도 없다”고 답변
	중국	• 왕이 당 중앙위 외사판공실 주임, BRICS 고위급 안보회의 참석 -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회담, ‘中,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소통강화, 패권정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며 다극체제와 민주주의를 위한 동력을 강화해야 함’, ‘露, 적극적으로 다자주의를 추구하고, 다자주의의 이름으로 다른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와 냉전적 사고방식에 반대’ -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대표와 양자회담 진행 - 왕이 주임, ‘남반구(Global South) 협력을 위해서는 △ 공통의, 포괄적인, 협력적인, 지속 가능한 안보의 추구, △ 개도국의 발전과 발전권을 국제 의제의 중심에 두어야 함, △ 문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이념적 경계와 불력 대결을 거부해야 함, △ 패권주의와 권력정치에 반대하며, 국제사회에서 UN의 역할을 적극 지지해야 함’
	중·러	•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 푸틴 대통령의 10월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 참석을 위한 방중 계획 발표
	기타	• BRICS 고위급 안보회의의 남아프리카공화국서 개최 - 최근의 안보 문제, 반테러리즘, 사이버안보, 식량·물안보,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해 협의 -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다극적 국제체제를 형성하며, 일방적 제재에 반대하고, 테러리즘·극단주의자·초국가범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 - 벨라루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브룬디,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쿠바 대표를 포함한 확대회의(the Meeting of Friends of BRICS) 개최,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이버안보 위협의 증대’ 논의 • EU, 흑해로 수출되던 우크라이나산 곡물 전량을 EU 회원국 육로를 활용해 우회 수출하는 방안 검토…가격안정 위해 운송비 지원도 고려 - IMF, 흑해곡물협정 중단으로 곡물가 최대 15% 상승 전망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26. (수)	북한-대내	• 김정은,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 관련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 방문(7.25.) 보도 -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강순남(국방상) 등 동행 -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 조용원(당중앙위 비서), 강순남(국방상), 최선희(외무상), 김성남(당중앙위 부장), 김여정(당중앙위 부부장) 등 동행 • 전승절 관련 군 지휘성원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7.25.) 보도 - 강순남, 정경택, 박수일 등 •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 관련 행사 진행 - 대성산혁명렬사릉, 신미리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김덕훈, 최룡해(이상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리영길, 오수용, 박태성(이상 당중앙위 비서) 등 화환 진정 - 철도렬사묘 준공식 진행(7.25.) 보도
	북한-대외	• 김정은, 쿠바 주석(디아스 카넬)에 몬카다 병영 습격 70주년 관련 축전 발송 • 러시아 군사대표단 평양 도착(7.25.) 보도 - 국방상(세이게르 쇼이구)을 단장으로 방문, 강순남(국방상), 정경택(총정치국장) 등 영접
	한·미	• 제4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수석 대표로 하는 이번 회의에서 北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온 양국 간 공조 작업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 - 양측은 北이 가상자산 탈취와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 위장 취업을 통해 연간 수익 달러 규모의 불법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평가
	미국	• 바이든 대통령, 한국전쟁 정전일 포고문…“한미동맹, 세계 평화 핵심축” - 바이든 대통령, 한국전쟁 정전협정일 포고문을 통해 “우리가 오늘 누리는 안보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자”고 선언 - 또한 또 윤 대통령 방미에 맞춰 한국전쟁 전사자인 루터 스토리 미 육군 상병의 유해를 송환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는 실종된 영웅 모두를 집으로 데려오려는 노력을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 • 백악관, 국방정책차관에 솔레이 국무부 선임고문 지명 - 백악관, 한국을 북한의 핵 위협에서 방어하기 위한 확장역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정책차관에 데릭 솔레이 국무부 선임고문을 지명 • 백악관, “월북 미군 새로운 내용 없어…상태 파악이 최우선”(정레브리핑) -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킹 이병과 관련해 추가할 내용이 없다”며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와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며, 그의 안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 • NSC, 러 대표단 방북에 “무기 논의해도 놀랍지 않아”(정레브리핑) -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 러시아 대표단 방북을 계기로 무기 공급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무기 공급 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반응하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답변
	중·러	• 중국 국방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러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따라 양군 해군 함대 태평양 지역 합동 순찰 발표 - 동 순찰을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국제 및 지역 정세와 무관하다고 주장
	기타	• EU,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한 벨라루스에 군사 장비 및 항공 부품 수출 전면 금지 결정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27. (목)	북한-대내	• 김정은,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 경축 대공연 참석(7.27. 0시) 보도 - 리홍충(중국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 김정은과 담화 및 시진핑 친서 전달 - 김정은, “한자리에 모여 조중 인민의 공동의 명절을 경축”하여 기념일이 더 빛나고, 정부대표단 파견은 “조중친선을 매우 중시하는 총서기 동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북한-대외	• 김정은, 쇼이구(러시아 국방상) 접견(7.26., 본부청사) 보도 - 쇼이구(러시아 국방상), 푸틴 러시아 대통령 친서 전달 및 김정은 기념품 수령 • 김정은, 쇼이구(러시아 국방상)와 무장장비전시회-2023 방문(7.26.) 보도 - 김덕훈·조용원·최룡해·리병철(이상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등 동행 - 김정은은 최근 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전투 기술기재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세계적인 무장장비 발전추세와 발전전략에 대해” 담화 • 러시아 군사대표단 활동(7.26.) 보도 -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와 해방탑에 화환 진정, 김민섭(국방성 부상)·임천일(외무성 부상)·마세고라(주북 러시아대사) 동행 - 만경대 방문, 김민섭(국방성 부상)·마세고라(주북 러시아대사) 동행 - 환영 연회 참석, 강순남(국방상), 정격택(군 총정치국장), 박수일(총참모장) 등 참석 •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 활동 보도 - 리홍충(중국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 단장 등 평양 도착, 김성남(당중앙위 부상)·강윤석(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문성혁(당중앙위 부부장)·박명호(외무성 부상)·박경일(조중친선협회 위원장) 등 영접 -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접견, 강윤석(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문성혁(당중앙위 부부장)·박명호(외무성 부상)·박경일(조중친선협회 위원장)·왕아군(주북 중국특명 전권대사) 참석 - 환영연회 참석, 최룡해, 김성남, 강윤석 등 배석
	한국	• 윤 대통령,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참석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친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경의” -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위령탑을 참배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군 전몰장병들을 추모 - “73년 전,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under one banner)’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 -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하여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 • 외교부, “러시아 대표단 방북이 北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로의 복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 (정례브리핑) -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금지되어 있는바,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北과의 불법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 - “한·중 관계가 기존의 입장으로 상호 존중, 호혜 그리고 상호 이익에 기반한 건강한 관계로 계속 발전해나가기를 희망” • 한·오스트리아 외교장관 회담(오스트리아) - 박진 외교부 장관 2022년 수교 130주년 계기 살렌베르크 장관의 방한 이후 동 장관의 초청에 대한 답방 - 양국 간 경제안보 및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및 문화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27. (목)	한·미	•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개최(미국 워싱턴 D.C.) -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미국 측에서는 제이미 곤살레스 국방부 실종자확인국(DPAA) 참모장, 한국 측에서는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등 참석 -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인 마이크 갤러거 하원,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것임이라고 답변
	미국	• 미국 국무장관-뉴질랜드 총리 회의 개최(뉴질랜드 웰링턴) - 블링컨 국무장관,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만나 미국-북대서양 정상회의의 주요 우선순위와 다양한 글로벌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측은 각자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도 논의 • 미국 국무장관-뉴질랜드 외교장관 회의 개최(뉴질랜드 웰링턴) -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나나이아 마후타 외교장관과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질랜드와 오커스(AUKUS) 협정의 비핵 분야에서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뉴질랜드와 다른 파트너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뉴질랜드가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다”고 언급 - 마후타 외교장관, “오커스 협정에 대한 뉴질랜드의 입장은 뉴질랜드가 핵 프레임워크 입장을 타협하거나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답변
	중국	• 중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개최(중국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계기) - 중국-인도네시아 2+2회담 개시 협의, 인도네시아의 곡물 수출, 건강, 공동 연구·개발, 인도네시아 수도 개발, ‘Two Countries, Twin Parks’ 프로젝트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문서 서명
	일본	• 제15회 일본·인도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인도) - △방위·안전보장분야에 대한 협력 가속화, △고속철도사업 및 인도 북동부 개발을 위한 협력 가속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향한 연계 중요성 확인
	러시아	• 러 국방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접견, 양측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발표 - 러시아 군사대표단은 25일 북한 도착, 사흘간 일정 소화...이번 대표단 방문이 북·러 군사 협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양국 협력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
	UN	•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성명 발표, “우리의 목표는 분명...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강조 - 북한을 겨냥해서는 모두가 평화·번영·인권을 누릴 수 있는 한반도의 비전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UN이 북한의 변함없는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UN 및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한 입국 허용 촉구
7. 28. (금)	기타	• NATO,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중단 선언 이후 흑해 지역 긴장 고조...해상초계기 및 드론 동원한 경계 태세 강화 -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흑해 해역의 안전 보장을 철회하고 흑해 북서쪽 해역을 임시 위험 지역으로 재지정...20일부터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가는 모든 선박은 잠재적으로 군사 화물을 실은 적대적 위협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 - NATO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의서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협정 탈퇴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곡물 최대 수출항인 오데사와 미콜라이우 등 주요 항구도시에 대한 미사일 폭격, 루마니아 국경과 인접한 레니 곡물 창고 드론 공격 등에 대해서도 비판
	북한-대내	• 김정은,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7.27.) 보도 - 리병철(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쇼이구(러시아 국방상), 리홍충(중국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 등 참석 - 강순남(국방상) 연설, “무력행사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에 한해서는 방위권 범위를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선포”하고, 무력사용을 기도하면 “여직 상상해보지 못한, 직면해보지 못한 위기를 당해야 할 것”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28. (금)	북한-대내	• 김정은,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 기념보고대회(7.27.) 보도 - 김덕훈·조용원·최룡해·리병철(이상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강순남(국방상), 정경택(군 총정치국장), 박수일(군 총참모장), 쇼이구(러시아 국방상), 리홍충(중국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 등 참석 및 리일환(당중앙위 비서) 연설 - 쇼이구(러시아 국방상),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축하연설 대독 •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 경축 국가연회 진행(7.27., 목란관·인민문화궁전·옥류관·청류관 등)
	북한-대외	• 김정은, 쇼이구(러시아 국방상)와 담화 및 오찬, 러시아 군사대표단 연회 개최(7.27.) 보도 - 연회에 조용원·리병철(이상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강순남(국방상), 최선희(외무상) 등 참석 - 리병철, 쇼이구 연설 •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 활동 보도 - 우의탑에 꽃바구니 진정, 문성혁(당중앙위 부부장), 박명호(외무성 부상) 등 참가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문성혁(당중앙위 부부장), 왕아군(주북 중국 특명전권대사) 동행 • 김정은,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 접견 및 연회 초대(7.28.) 보도 - 조용원·최룡해(이상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리일환·오수용(이상 당중앙위 비서), 최선희(외무상), 김성당(당중앙위 부장), 김여정(당중앙위 부부장) 등 참석 및 김여정과 리홍충 연설
	한국	•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장관 취임식에서 “당장의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 北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통일 비전을 바탕으로 국격과 국민 기대에 맞게 흔들림 없이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 “남북관계의 일시적인 부침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으며, 긴 호흡을 갖고 분명한 원칙하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 - “이런 때일수록 오로지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 통일·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풀어내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 - “北이 자유, 민주, 인권, 법치, 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길로 나오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노력” - “비상한 각오로 이러한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통일업무를 성찰하고 새롭게 정비” - “北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뿐 아니라 국내외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이 지속해 추진할 수 있게 할 것” - “통일부의 핵심 과제로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포기 유도,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문제 개선, △확고한 가치와 비전에 따른 통일 준비를 제시” - “통일부는 北이 대화의 장에 나올 것에 대비해서 식량·인프라·금융 등 ‘담대한 구상’의 단계적 이행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야” - “탈북민의 안전을 지키고 입국을 원하는 모든 탈북민이 입국할 수 있도록 ‘전원수용 원칙’을 따르겠다는 방향 제시” • 문승현 통일부 차관, “조직개편을 통해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재편(축소) 예상” -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 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이상 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등 4개 조직이 국장급 조직 1개로 통폐합,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신설 - “남북 대화와 교류가 ‘제로(0)’인 상황을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해 운영하겠지만 조직의 유연성, 효율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 -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를 담당하는 납북자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조직의 어젠다이자 장관 어젠다로 챙기기로”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28. (금)	한국	- “오늘 기준으로 통일부에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6명 중 개방직 제외한 5명과 무보직 상태인 전 통일비서관 등 총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 “남북 간 교류·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 국제정치 상황에 걸맞은 유연하고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안을 검토”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법적 근거 없이 조처할 수 없는 기관이어서 로펌과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해 (향후 조처를) 고민하는 단계” • 통일부, ‘정전협정 체결일 70년 동향 평가’, ‘北의 전승절 70주년 행사가 내부 정치행사보다 중·러 대표단과 친선행사 위주로 진행’(언론 배포 분석자료) - 中보다는 러시아와 더욱 밀접한 협력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 - 北의 정전 70년 행사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맞서는 북·중·러 연대 구도를 보여주는 데 집중 • 외교부, “터너 특사는 오랫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다뤘은 전문가로서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출입기자단 공지) -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의회 인준 절차를 마친 데 대해 28일 환영 -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계기로 北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 •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임사 “北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반감,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피로가 심화하면서 통일부의 역할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아” -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통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 길을 찾아야 할 때” - “무엇보다 北이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고, 대화의 문을 굳게 닫아건 채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도발과 위협의 수위를 계속 높이는 상황” - “헌법적 책무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기반으로 통일 대북 정책을 더욱더 발전시켜달라” • 한-UAE 원자력 고위급협의회 개최 - 제3국 공동진출 협력모델 구축,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선진 원자로 분야 공동연구 등 새로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규제기관 간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공동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미국	• 백악관,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발표 • 상원,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 가결 • 대통령 권한 발동해 대(對)대만 군사 지원안 발표 - 바이든 대통령, 대통령사용권한(PDA)을 발동해 3억 4,500만 달러 규모 대만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 - 군사적 지원에는 미국의 방위 물품과 서비스, 군사 교육과 훈련이 포함 - 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 민진당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 요청은 대만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들고, 대만해협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 - 中 국방부 대변인, ‘내정간섭이자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침해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 • 美, 러 국방장관 방북을 두고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 (정례브리핑) -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수대변인, 중·러 대표단의 방북을 두고, 러시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데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며, 중국이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촉구하는데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바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28. (금)	미·호	• 미 국무장관-호주 총리 회의 개최(호주 브리즈번)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미국-호주 동맹과 파트너십이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민주주의 및 안정을 위한 닛 역할을 한다는 믿음을 재확인 - 이어 양측은 영국과 함께 AUKUS 3자 간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진전을 환영 • 미국-호주 외교장관 회담 개최(호주 브리즈번)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페니 워드 호주 외무장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참여 및 인프라 지원을 늘리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쿼드(Quad) 등과 같은 다자 간 기구와의 협력에 대해 논의 - 블링컨 국무부 장관, 미국은 기후문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가 주권 허위정보 대응 등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 호주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 - 워드 외무부 장관, 아세안 중심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추가 협력에 동의
	중국	• 중국-조지아 정상회담 개최(중국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계기) - 중국-조지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합의
	일본	• 2023년도 방위백서 발표 - △우리(일본)의 고유의 영토인 독도 문제가 미해결로 존재, △북한은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중국은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음. - 韓 외교부, 주한일본 총괄공사대리 초치...외교부 대변인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 - 中 외교부 대변인, '일본이 주변국의 안보우려를 존중하고,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며, 역내 안보위협을 과장하고 재무장할 명분을 찾는 것을 중단하여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을 것을 촉구'
	기타	• EU,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디지털 정보 조작'에 관여한 러시아 국적 개인 7명 및 기관 5곳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 - EU는 추가 제재 대상자들이 이른바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뉴스(RRN)' 명분으로 온라인상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허위 선전 확산에 관여했다고 설명...일부 단체는 러시아군 정보기관 총정찰국(GRU)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지적 • G20 환경장관들, 인도 첸나이에서 열린 환경장관회의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재생에너지 확대 등 논의...합의 실패
7. 29. (토)	한국	• 한·튀르키예 외교장관 회담(튀르키예) - 형제국가로서 튀르키예 신정부와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방산·인프라·원전 등 분야 전략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
	미·호	• 미국-호주 외교·국방장관 2+2(AUSMIN) 회담 개최(호주 브리즈번) - 미국-호주 외교·국방장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2025년까지 호주에서 유도 다연장로켓(GMLRS)을 공동 생산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이번 협력 합의는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국방산업 기반을 강화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 -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 "우리는 2년 안에 호주에서 미사일 생산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29. (토)	중·EU	• 중국, 프랑스에 중-EU 관계개선 지원 요청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제안 - 제9차 중국·프랑스 경제·금융대화 베이징에서 개최...허리핑 중국 부총리는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에게 이와 같이 제안하며, 중국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 - 르메르 장관은 양국이 경제 및 금융 협력 심화를 고민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프랑스는 중국과의 새로운 기술 협력을 생각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
	일본	• 하야시 외무상 스리랑카 방문, 스리랑카 총리 및 대통령과 면담 - 스리랑카의 채무재편의 진전을 기대, 모든 채권국들이 참가하는 투명하고 공평한 채무재편의 중요성을 확인
	러시아	•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러시아 상테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7.27.~28.)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대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호평했으며, 러시아 외무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필요성을 거론하며 30여 개 평화 제안을 건넸다고 발표...푸틴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화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 - 푸틴 대통령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등에서 NATO와의 충돌을 원하지 않으나, 러시아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발언
7. 30. (일)	북한-대외	•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 활동 보도 - 만경대 방문(7.29.) 보도, 문성혁(당중앙위 부부장), 왕아군(주북 중국 특명전권대사) 동행 - 평양 출발, 김성남(당중앙위 부장), 강윤석(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혁, 박명호, 박경일, 왕아군 등 전송
	한국	• 軍, 北 무인기 위협 대응 위한 “휴대용 드론건 사업은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 드론건’을 헬기에 장착하는 사업으로 2024년 전력화가 목표” - 무인기가 수신하는 위성항법장치(GPS) 신호와 지상에서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발신하는 조종 신호를 교란해 무력화하는 ‘소프트킬(Soft Kill)’ 방식의 드론건 도입
	일본	• 하야시 외무상-몰디브 외교장관 회담(몰디브), ‘인도양의 안전보장 및 평화, 안정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갈 것’
	기타	•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 폴란드 남부 글리비체의 한 무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벨라루스에 있는 러시아 바그너그룹 용병들이 폴란드의 전략적 요충지와 인접한 국경 쪽으로 이동, 불법 이주민으로 위장해 국경을 넘어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 - 약 100명의 바그너 부대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 서부 도시 흐로드나 근처로 이동했다며, 이는 발트 3국-NATO를 잇는 요충지 수바우키 인근으로 러시아가 이 지대를 장악할 경우, 발트국과 NATO를 분리 가능...폴란드·리투아니아·라트비아, 유사시 국경 폐쇄 검토
7. 31. (월)	한국	•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손해배상 청구 관련) 사실관계 더 확인, 원칙적 입장으로 대응” (서울현충원 참배 후 인터뷰) - “납북자 문제, 억류자, 국군포로에 대해 통일부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것” - 통일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교류협력국과 남북회담본부 등 4개(실장급 1개, 국장급 3개) 조직이 국장급 소속기관으로 통폐합되고,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도 실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축소 • 통일부, “北 ‘인권동토대’ 발간...北이 현재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기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스스로 보여줘” (정례브리핑) - “(열병식 관련) 내부 정치행사보다, 中 및 러시아 대표단과의 친선 행사 위주로 진행, 대외 메시지 전달 집중”

일자	구분	주요 내용
7. 31. (월)	한국	-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인 것을 규탄” -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평화를 모색하기보다 핵 개발과 대결의 자세를 고집하는 것에 강한 유감” • 국방부, “유엔 안보리 결의상 北의 모든 무기 거래 금지…北과의 불법 무기 거래 즉각 중단되어야” (정례브리핑) - “8월에는 한미연합연습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정부와 군의 군사연습을 연계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간에 지금 협의를 진행” - “방위사업청은 북한의 다양한 무인기와 드론 위협에 대비하여 실전적 대응능력을 향상” • 김승겸 합참의장, 중부전선 점검 “적 도발 시에는 결정적 일격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내야” - 한·미연합연습인 울지프리덤실드(UFS)를 앞두고 31일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제5군단사령부와 최전방 일반전초(GOP)를 방문해 결전 태세를 점검 • 한·이탈리아 외교장관 회담(이탈리아) - EU 내 韓 3위 교역 대상국인 이탈리아와 우주·항공 등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확대 및 내년도 G7 의장국이자 유사 입장국인 이탈리아와 국제무대에서 가치 연대 강화 방안 등을 논의 - 자유국제사회과학대학교에서 이탈리아 싱크탱크 인사들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인태 전략을 소개하고, 내년도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 등을 논의
	미국	• 美, 북한의 대러 무기제공 가능성에 “주저 없이 제재할 것”(정례브리핑) -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거나 제재해야 하는 행동을 할 때 (추가) 제재를 주저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변 - 이어 김정은의 푸틴 대통령 초청 질문에 “두 나라는 긴밀한 관계에 있으나 이는 세계 안보 증진 차원에서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답변
	미·중	• 미-중 고위급 당국자, 워싱턴 D.C.에서 회동 -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사라 베런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수석 국장, 양 타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 국장을 초청 - 미 국무부 성명 통해 “양측은 열린 의사소통 라인을 유지하고, 양국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발표 - 이어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안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양자, 지역,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

II

북한 매체 주요 보도

1. 대 내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7.6.)

- 노동신문 7월 6일자는 전날 진행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기사를 게재함.
 - 김덕훈 내각 총리가 회의를 지도하고 박정근·양승호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하였으며,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회의 결정 집행을 위한 2023년도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정형을 총화하고 당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 박정근 부총리는 전국 범위에서 관개공사가 진행되어 농업 생산의 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곡식 생산계획이 수행되었으며, 평양시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완공된 데 이어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및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 등 중요대상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 회의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당면한 영농 공정들을 실속있게 진행할 것, 각급 농업 지도기관들이 농업토지를 통일적으로 장악·관리하고 농사지도를 과학기술적으로 할 것, 국토관리·생태환경보호 사업을 전망적·발전지향적으로 추진할 것, 당의 육아정책을 일관되게 관철하며 품질감독사업을 개선할 것 등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채택

■ 김정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 지도(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7.13.)

- 노동신문 7월 13일자 1~3면은 전날 진행된 김정은 위원장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 지도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함.
 - 미사일총국은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적대세력들의 위협천만한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정당방위권 강화의 일환”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하에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진행 하였으며, 미사일은 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하였다고 발표
 - 시험발사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도발행위가 전례없이 가증되어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안보 형세가 랭전시대를 초월하는 핵위기 국면에 다가선 엄중한 시기”에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적 판단과 중대결심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보도하고,

- 구체적으로 ‘워싱턴 선언’, 한미 핵 협의그룹, 미국 핵추진 잠수함과 핵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등을 지적
- 또한 “보다 엄중한 것은 우리의 주권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극히 도발적인 공중정탐 행위에 매여달리고 있는 미국이 40년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을 탑재한 미핵잠수함을 남조선에 투입하여 조선반도 지역에 핵무기를 재반입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고, 적대세력들에 의해 한반도 안전 환경이 엄중히 위협받고 있는 현 정세는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노선 관철에 더욱 분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라고 확인

■ 김정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관련 장소 방문(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7.26.)

- 노동신문 7월 26일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와 중국인민지원군렬사능원의 방문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김 위원장은 25일 강순남 국방상 등의 동행으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방문 하였고 “영웅정신과 투쟁본때”를 계승할 때 “세계에서 가장 존엄있고 자주적인” 나라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확인
 - 또한 그 즈음에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에 조용원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강순남 국방상,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당중앙위 부장,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과 함께 방문함.

■ 김정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보고대회 참석(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7.28.)

- 노동신문 7월 28일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날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 기념 보고 대회에 참석한 기사와 사진을 함께 게재함.
 - 보고대회에는 김덕훈·조용원·최룡해·리병철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참석 하였고, 강순남 국방상,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 박수일 군 총참모장 등이 주석단에 나왔으며,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과 리홍충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리일환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이 연설했.
 - 연설자는 미국이 “분별없이 날뛰며 조선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 과도한 야망과 함께 역사의 무덤에 매장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당과 인민은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이 세운 전투적 공훈과 역사적 공적을 절대로 잊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함.

- 쇼이구 국방상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하연설을 대독하였는데,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지지와 관건적인 국제문제들에서의 로씨야와의 연대성”은 “우리의 공동의 리해관계와 결심을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강조

2. 대 외

■ 김성일 외무성 국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 방북 계획 관련 거부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3.7.1.)

- 조선중앙통신은 7월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의 방북을 거부하는 내용의 김성일 외무성 국장의 담화를 게재함.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정몽헌 회장 20주기 추모식을 위해 금강산에 방문하고자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평화위)와 접촉하기 위한 계획을 통일부에 신고
 - 외무성은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 표명
 - 또한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입장이며, 금강산 관광지구는 북한 영토의 일부분이므로 방북 문제에서 아태평화위는 어떤 권한도 없다고 밝히고 “이러한 원칙과 방침은 불변하며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선언

■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 담화(조선중앙통신, 2023.7.9.)

- 조선중앙통신은 7월 9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관련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의 담화를 게재함.
 -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평가보고서를 명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려는 것을 겨냥하여, 다량의 핵오염수가 태평양으로 유입되면 “악성종양 등 인류의 생명안전과 생태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고 주장
 - 또한 “문제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핵오염수 방류 계획을 적극 비호두둔, 조장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환경평가기구도 아닌 IAEA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존재 및 수많은 환경보호 단체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열성을 보이는 것에 대한 의혹이 짙어진다고 주장

- 주권국가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도 문제삼던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극구 비호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중 기준을 보여주며, 한국과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정학적 목적 추구만을 원하는 불순세력에 의해 지구의 생태환경이 엄청히 위협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난

■ 국방성 대변인 담화 통해 최근 미국의 한반도 지역 군사활동 비난(조선중앙통신, 2023.7.10.)

- 조선중앙통신은 7월 10일 미국의 최근 한반도 지역 군사활동을 비난하는 국방성 대변인의 담화를 게재함.
- 미국 국방부가 10일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한반도 지역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국의 이러한 전략핵무기 전개 시도는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핵공격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이라고 비난
-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격돌상태가 최악의 위기에 다가선 오늘”의 상황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극단의 상황”이 조성되는 여부는 미국의 향후 행동에 달려 있고 돌발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또한 미국이 최근 아시아태평양 작전지역에 전개된 각종 공중정찰 수단을 동원하여 적대적인 정탐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7월 2일부터 9일까지 전략정찰기 RC-135, U-2S, RQ-4B가 동해와 서해 상공을 비행하고 특히 동해에서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수십 킬로미터나 침범하는 사건이 몇 차례나 발생했다고 지적
- 1969년 미군 정찰기 EC-121과 1994년 주한미군 OH-58이 격추당한 사건과 2003년 3월 정찰기 RC-135에 대한 북한 지역 유인 시도 사건을 거론하며, “미국의 도발적인 공중정탐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위협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미국 공군의 대북 정탐활동 비난(조선중앙통신, 2023.7.10.)

- 조선중앙통신은 7월 10일 미국 공군의 대북 정탐활동 관련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의 담화를 게재함.
- 10일 오전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미국의 대북 공중정탐 활동을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함참이 북한의 영공 침범 주장은 허위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미 국방성이나 미 인디아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 자처해 나서고 있다”고 비난

- 당일 오전 새벽 5시경부터도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울진 동쪽 270여 km부터 통천 동쪽 430km 해상 상공에서 북측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며 공중정찰을 감행했고, 북한 공군의 대응출격에 한차례 퇴각한 후에도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km 해상 상공에서 다시 해상군사분계선 상공을 침범하는 군사적 도발을 했다고 주장
- “미국 간첩비행기들이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곤 하는 우리 경제수역 상공 그 문제의 20~40km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북측 경제수역 바깥에서의 정탐행위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겠지만 또다시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경제수역을 침범할 경우 분명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위임에 따라 반복 경고한다고 발언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미국의 대북정탐 추가 비난(조선중앙통신, 2023.7.11.)

- 조선중앙통신은 7월 11일 미국의 대북정탐 활동 관련 김여정 부부장의 추가 비난 담화를 게재함.
- 북한이 비난한 미군의 대북 정탐활동 관련하여 합참이 10일 “한미동맹의 공해 상공에서의 정상적인 비행활동”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을 지적하며, “해당 공역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군과 미군 사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비난
- 10일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5시 15분부터 13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km~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km 해상 상공에서 조선동해 우리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 침범하면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전날 담화에서 세부 내용을 보강하여 발표
-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행동을 이미 예고”했으며, 무단 침범이 반복되면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최선희 외무상,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규탄(조선중앙통신, 2023.7.11.)

- 조선중앙통신은 7월 11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계획 관련 최선희 외무상의 규탄 담화를 게재함.
- 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여 국제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불법무도한 나토의 계단식 동진으로 유럽 대륙의 안보를 끝끝내 전쟁위기 상황에 몰아넣은 미국이 이번에는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까지 위태하게 만드는 반인륜적 만행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

- 집속탄 지원 계획은 “침략과 살육을 국책으로, 생존방식으로 삼고 있는 평화 도살자로서의 정체를 다시 한번 스스로 드러내보인 것”이며,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의도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원흉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인류의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실증하여 준다”고 주장
- “위임에 따라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량살육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세계를 새로운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로 준렬히 규탄하며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북한 정부와 인민은 러시아가 반드시 중국적 승리를 이룩할 것을 확신하고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발언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화성포-18》형 시험발사 관련 미국의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개최 비난(조선중앙통신, 2023.7.14.)

- 조선중앙통신은 7월 12일 진행된 북한의 《화성포-18》형 시험발사 관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14일에 게재함.
 - 미국의 “반공화국 핵대결 정책”을 철저히 제압·분쇄하는 것은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이며,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비질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주장
 - 12일 진행한 《화성포-18》형 시험발사가 국제 해상 및 항공 안전에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았음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와 미국의 핵전쟁 발발 가능성 증대 행위를 외면한 채 이를 문제 삼는 공개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미국과 서방에 완전히 얹어진 신판전 기구라는 것을 유감없이 증명 해보였다”고 비난
 -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구태의연하고 비법적인 명분으로 북한의 정당방위권 행사를 문제시한 유엔 안보리의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세계 평화와 안전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누가 핵으로 위협하고 누가 핵위협을 당하는가 하는 것부터 정확히 판별해야 하였을 것”이라고 지적
 - 또한 “미국 상전이 하는 짓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데 습벽화된 어중이 떠중이들이 장외에서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반공화국 《공동성명》 발표 놀음에 합세한 데 대해 경종을 울린다”며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의 대북 규탄 공동성명에 대해 비난
 -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공화국 노선을 포기할 때까지 가장 압도적인 핵억제력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미국의 ‘전제조건 없는 북미대화’ 등 주장 일축 (조선중앙통신, 2023.7.17.)

- 조선중앙통신은 7월 17일 미국이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을 비난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게재함.
 - 김 부부장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는 소리가 얼마나 황당한가를 밝히”고자 한다며 북미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CVID》 따위에 불과할 것”이며, 이는 “현실에서 통하지 않을 소리”라고 강조
 - 결국 미국의 제안은 “모두 가변적이고 가역적인 것 뿐”인 것은 명백하고, 미국이 “바라는 것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이기 때문에 “밀지는 일은 하지 않”으며 “현실을 직시하며 현실을 중시”함.
 - “미국은 자기자신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건드리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어야” 하며, 며칠 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 것은 북한의 “군사적 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고 천명

■ 강순남 국방상,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 비난 및 핵사용 조건 해당 가능 위협(조선중앙통신, 2023.7.20.)

- 조선중앙통신은 7월 18일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와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의 부산항 작전기지 기항에 대해 비난하는 강순남 국방상의 담화를 게재함.
 - 그는 특히 전략핵잠수함의 기항이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핵무기를 전개하는 가장 로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이라며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피력
 - 이어 “나는 이 담화를 통하여 미 군부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와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데 대하여 상기시킨다”며 “공화국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립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위협
 - “우리 국가의 《정권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집단에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며 “두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며 핵을 사용하려는 “미국과 졸개들의 미친 짓을 철저히 억제, 격퇴함”으로써 국가의 주권, 영토완정,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핵전쟁 방지를 위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

■ 김정은,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 접견(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7.27.)

- 노동신문 7월 27일자 1면은 전날 김정은 위원장과 쇼이구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군사대표단과의 접견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쇼이구 국방상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국방 안전 분야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견해일치”를 보고 국방안전 분야에서 “전략전술적협동과 협조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됨.

■ 김정은,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과 무장장비전시회-2023 방문(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7.27.)

- 노동신문 7월 27일자는 전날 김정은 위원장과 쇼이구 국방상 등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무장장비전시회장을 방문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강순남 국방상이 영접보고를 했으며, 김덕훈·조용원·최룡해·리병철 등 당중앙위 상무위원들이 참가함.
 - 김 위원장은 최근 군이 장비하는 무기 전투 기술재를 소개하고 세계적인 무장 장비 발전 추세와 발전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두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견해”를 피력함.

■ 김정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경축 대공연 관람(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7.27.)

- 노동신문 7월 27일자는 0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의 친선 사절들과 함께 경축 대공연을 관람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함.
 - 리홍충 중국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이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형제적 중국 인민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 김정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경축 열병식 참석(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7.28.)

- 노동신문 7월 28일자 1~8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날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 경축 행사 참석과 강순남 국방상의 연설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열병식에는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과 리홍충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초대되었으며, 리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강순남 국방상 등이 참석함.
 - 강순남 국방상은 연설에서 “무력행사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에 한해서는 방위권 범위를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선포”하고, 무력사용을 기도하면 “여직 상상해보지 못한, 직면해보지 못한 위기를 당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함.

- 또한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국가의 안전이 더 이상 위태해지는 것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국가와 자주권과 안전을 군사적으로 침해하려는 행위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무력대응을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해나갈 것”이라고 피력

■ 김정은,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과 담화 및 오찬, 러시아 군사대표단 연회 개최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7.28.)

- 노동신문 7월 28일자 11~12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위해 개최한 행사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김 위원장은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과 당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담화를 나누고 두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를 발전시키는 데 토의하고 함께 오찬을 나눔.
- 또한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위한 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조용원·리병철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강순남 국방상, 최선희 외무상 등이 참석하였고, 리병철과 쇼이구가 연설함.
- 리병철은 연설에서 러시아 군대와 인민에게 “가장 뜨거운 전투적 경의와 지지 성원”을 보내고, “필승불패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함. 쇼이구는 “친선과 복리를 기원”하며 “다방면적 협조”를 발전시킬 용의를 피력함.

■ 김정은,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 접견 및 연회 초청(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7.29.)

- 노동신문 7월 29일자 1~2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중국 대표단을 위해 개최한 행사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김 위원장은 리홍충 중국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 대표단과 접견했고, 당과 인민이 시진핑의 영도에 따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며 “친선과 동지적 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려는 입장을 재확인함.
- 연회에는 조용원·최룡해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리일환·오수용 당중앙위 비서,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당중앙위 부장,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등이 참석하였고, 김여정과 리홍충의 연설이 있었음.